

한국 징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창수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정책실장, changsoo@korea.com)

1999년 12월 23일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로 보일 정도로 쟁점이 되었다. 군 경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책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점제도 폐지'가 '군경력에 대한 보상 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남성들의 반발이 컸다. 군가산점 제도 논란에서 나타난 남성들의 태도는 "돈 없고 땀없어 강제 징집되어야 했던 힘없는 남성을 상대로 싸움을 건 여성단체의 부도덕한(?) 행태를 열렬히 비난하면서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병역기피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였다"고 이해된다. 즉 한국 남성들의 징병제 아래서 군복무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사건이다. 이는 징병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병제에 대한 검토는 강제적 군복무의 문제점 해결,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제대군인들의 지위 향상과 군대 운영의 민주화와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징병제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징병제의 문제점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많은 나라들이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의무병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의무병제의 모순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국 등의 국가는 지원제로 전환하였고,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징병제를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징병제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병제에서도 인력비용이 상승한다.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징집병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어 징집병에게도 민간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인력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병역의무의 불평등성이 나타난다. 징병제의 핵심은 형평성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때문에 불공평성이 두드러진다.

셋째, 군복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므로 장기근속자가 부족하여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현대무기체계는 높은 숙련도때문에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병사들이 의무기간이 끝나버리면 전역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째, 국제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의해서 징병제는 근거를 잃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보상황, 국민의 방위의식강화, 예산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서 징집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민의 방위의식은 징집제에 의해 고취되지만은 않는다. 국민의 애국심과 충성심에 기초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를 지닌 모병제이다. 예산 역시 앞서 살핀 것 처럼 징집제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징집제의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징병제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무기간과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확대하며, 징집병에 대한 훈련은 비전투부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들도 모든 징집의무자를 징집하는 것은 인력의 낭비라고 판단하여 지원제와 징집제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토국가들의 경우 지원병의 규모가 징집병을 초과하고 있다.

<표1>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징병제	-병역의무의 형평부과 -우수자원자의 확보 -군의 단결과 지휘의 용이 -장기복무 군전문요원의 확보 곤란	-병무행정의 복잡 -국민부담의 과중 -특수장비운용요원의 확보곤란 -장기복무 군전문요원의 확보곤란
모병제	-장기복무로 인한 국민부담경감 -병역의무로 인한 압박해소 -특수자질자의 확보 용이	-유사시 예비군동원체제의 확보곤란 -국토방위를 일부국민이 담당 -병역의무에 대한 사명감 결여 -국가예산소요

자료 ; 김문성, 「병무행정론」, 44쪽, 법문사,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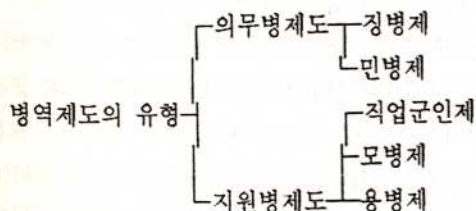
한국 징병제도, 병력수급과 형평의 문제 초래

병역대상자의 수급과 형평을 고려하면서도 전투력을 보유할 수 있는 병역제도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다. 특히 한국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수급과 형평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도 병역대상자의 수급과 형평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정규병력의 규모와 복무기간이 한정된 상태에서 징집제도를 실시하니 병역수급과 형평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병역인구의 과잉으로 인한 병역의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위병제도를 신설하여 군전투력의 보강과 함께 잉여자원의 흡수를 피하여 왔다. 병역특혜제도로 되어버린 병역의무특례제도 역시 원래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의 징집제도가 계속된다면 거대병력을 거느리는 병역국가에서 탈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복무기간은 징집제도나 병력유지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제도나 병력의 규모와 관련하지 않는 복무기간의 단축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국육군의 복무기간이 26개월로 단축된 것도 방위병폐지에 따른 병력규모 조절의 노력이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26개월의 복무기간도 길다. 적정복무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원제로 전환은 필요하다. 결국 징병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이러한 병역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길이다.

<표1> 병역제도의 유형



징집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군대의 억압구조

병역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할 필요는 병력수급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은 아니다. 징병제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권리의식이 확산되면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가치의 확산이 군대의 가치와 충돌하고 있다. 사회생활에 비교해서 군생활에 대한 매력의 감퇴는 징병제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사이에도 이런 현상은 이미 1880년대말부터 생겼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1989년에 실시한 「장병의 의식구조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현역복무를 안하는 청년들을 행운아로 보며, 직무에 대한 만족감도 낮고, 전우와의 일체감, 상경하에 분위기, 지휘관에 대한 존경심, 군인으로서 자부심도 낮다.

둘째, 개인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강한규제나 인격을 매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강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셋째, 군법이나 군기유지활동이 너무 엄중하여 형식에 치우쳐 있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군의 현실이라고 본다.

넷째, 군생활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응답도 많으나(59.3%), 군복무의 최대목표는 시간을 때워서 성한 몸으로 제대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많다(30.2%).

이러한 경향은 장교집단의 의식성향에도 나타난다. 270명의 장교에 대한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퇴직을 할 생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2.9%인 35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근무하면서 고려해보겠다는 사람이 132명이고, 기회가 있으면 전역하겠다는 사람(69명, 25.5%)과 가능하면 즉시 전역하겠다는 사람(34명, 12.5%)이 38%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사병들과 장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징병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국민이나 사병들이 군에 대한 가치를 사회생활에 대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변화된 국제정세, 징집제도의 강제성, 군대의 낙후된 민주주의 때문이다. 국제정세나 남북관계의 변화로 국민들은 징집제도를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라고 여기기 보다는 강제성 있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내의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분위기는 사병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었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도의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 군대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독이 병역제도개선과 함께 군의 시민화와 정치교육을 통한 문민우위적 통제하의 군위상정립, 나치시대의 정치적 특권화와 무조건적 굴종적인 군대청산, 군내부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병사 개개인의 권익신장과 양심의 자유를 추구할 권리인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병력규모 감축과 병역제도 전환

한국의 상비병규모는 국방부가 91년 9월 5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라 방위병제도가 폐지되어 70만 규모가 되었다. 병력규모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지만 통상 적당한 병력규모는 인구의 1%를 들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의 병력규모는 인구의 1%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병력규모에 대한 고정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병력규모는 정치지도자들이 군사전략적 감각에 의해 임의로 정해야 하는 숫자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 가운데 통일이전 남북한의 군사력의 최종수준을 10만명으로 제안한 사람도 있다. 북한도 90년 5월 30일 발표한 5.30 군축안에서 남북한이 군축을 합의한 후 4년동안 3단계로 병력을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1단계에서는 30만 유지, 2단계에서는 20만, 3단계에서는 10만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당한 규모의 방위력이란 병력규모통제를 통하여 소수병력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상비병의 수준을 30만으로 하여 군대의 전문화를 피하고, 군대와 사회의 민주화로 다양한 수준의 위협에 대처하는 사회적 대응능력을 향상한다면 이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30만으로 감군은 그동안 북한도 주장한 바 있으므로 북한의 대응을 유발하여 남북한의 평화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남북의 60만 상비병력은 국제적인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통일조국의 방위에도 적합한 규모가 된다. 한국군을 30만으로 감군하고 여기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병력을 배치하면 된다.

한국군의 병력 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나토국가들과 미

국 등의 병력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6%-0.8%인데 비하여 우리는 1.7%가 된다. 병력을 30만으로 줄일 경우 인구에서 차지하는 병력의 비율은 약 0.7%가량이 되어 평균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30만으로 감축한다면 결국 현재의 징집제는 해마다 18세가 되는 징집대상인구가 40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지원제로 전환하지 않고 30만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징집대상인구를 고려하여 볼 때 복무기간이나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30만으로 감축할 경우에는 병역제도 자체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예비군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30만 감축을 위한 보완 조치로서 재정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병역제도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수 없다.

징집제를 지원제로 전환한다면 직업군인제도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장교와 하사관은 직업군인제를, 사병은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군인제란 군인으로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제도이다.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수가 지급되며, 군인의 길에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된 제도이다. 모병제는 본인의 자의의사에 의해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 신분별, 그리고 병과별 희망에 따라 지원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모병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애국적의에 바탕을 둔 제도라는 점에서 용병제와 다르며 명예로운 높은 직위 등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등 군인의 길에 생애를 바칠만한 보람있는 것으로 인식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직업군인제와도 구분된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16만 직업군인을 유지하고 여기에 14만의 지원병을 모집할 수 있는 군대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확보한다면 30만의 정예군대가 구성된다. 그리고 지원자 개인에 대하여 능력과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14만 지원병의 군복무기간은 장단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군대가 민주화되고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안보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과 군제도의 개선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특히 전통적인 군사안보가 아닌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안보 개념정립이 중요하다.

향토예비군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병역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한다면 예비군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뿐더러 예비군제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피하다. 예비군을 편성하는 이유는 상비군의 유지를 비용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즉 유사시 요구되는 예비군은 평상시에도 막대한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향토예비군제는 이러한 예비군 고유의 기능을 담당과는 거리가 멀다. 도리어 한국의 향토예비군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예비군과는 성격이 다른 기형적 제도이다. 예비군이 필요한 이유에 따르면 예비군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상비군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예비군은 총체 전력의 일부로서 독자적인 전력을 형성하여 상비군과 협력하여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역복무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비군에 복무해야 한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선택적 지원제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징병제'를 지원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비군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병역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하고 예비군을 유사시 전력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향토예비군제도를 완전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별지원제를 채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별지원제는 현역지원과 예비병지원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징집대상인구에 대한 형평의 구현때문에 필요하다. 즉 징집대상자가 현역과 예비역 가운데서 선택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제 아래서 현역의 지원유인책이 되면서 동시에 유사시 전투력을 보유한 예비군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 경우 지원예비군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기초적인 훈련을 한 다음 일정기간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예비군 편성규모와 기간은 전투력,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병력구

모는 상비군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약 60만이면 적합할 것이다. 앞으로 징집대상인구는 약 35만 수준이므로 예비군 편성기간을 24개월로 한다면 인력수급에는 차질이 없게된다. 필요하다면 예비군의 손실보충을 위한 대기예비군을 구성할 수도 있다.

죽임을 강요하는 징병제를 지원제로 바꿔야

현재의 병역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분명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병역제도 개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만 감축조치는 병역제도의 구조적인 변혁을 가져온다. 병역제도의 개혁은 그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도 불가피하다. 징집제를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원제로 전환은 병력수급과 형평의 문제로 인하여 현역과 예비역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직업군인제에 의한 현재의 16만 규모를 유지하는 직업군인과 모병제에 의한 14만 규모의 사병을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의 사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 정도에서 검토한다.

둘째, 향토예비군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성격이 모호하고 불필요하게 비대한 현재의 향토예비군을 폐지하고 지원병제도와 결합할 수 있는 예비군을 창설한다. 현역지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예비군 복무의 의무를 지닌다. 예비군의 규모는 60만, 편성기간은 24개월정도가 적합하다.

셋째, 이러한 조치들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은 단계적일 수가 있다. 단계적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 조치가 뒤따른다면 상호군축으로 발전한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냉전제도의 해소와 평화정착의 관점에서 병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의 징병제도는 제도적으로도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평화운동은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관점을 뛰어 넘어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징병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사병군무를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비도덕성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징병제는 지원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

한국의 병역, 군사제도변혁에 희망이 있다! 군의 자주화와 민주화의 긴 여정을 중심으로

김삼석 (군사문제연구가, hiarmy@orgio.net)

이습우화 - 목마른 사자와 멧돼지

더운 여름날 목마른 사자와 멧돼지가 작은 샘터로 왔다.

그러나 누가 먼저 물을 마시느냐 하는 것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은 어느 한 쪽이 죽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둘은 마지막 결전을 위하여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독수리들과 까마귀들이 몰려와 그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본 사자와 멧돼지는 싸움을 멈추고 "우리들은 독수리 떼나 까마귀의 먹이가 되기보다 차라리 친구가 되는 것이 좋겠어!"라고 말하였다. 작은 샘터는 휴전선을 사이에 군사분계선이다.

이제 젊은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독수리 떼나 까마귀 떼가 서서히 몰려가고 남북의 멧돼지와 사자가 친구가 될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대가 가히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이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10.12일 북미공동성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단과 전쟁으로 얼어붙은 지난날을 한꺼번에 녹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징병제를 필두로 비로소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한반도 군사구조의 변혁의 과정을 군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군의문사를 비롯한 군인들의 자주적인 인권문제가 있다.

"집이 부산인데 아들 놈이 강원도 첩첩 산골에서 총으로 자살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 처참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부대 측이 무조건 자살이라고 하면서 빨리 화장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살을 믿을 수 없어 죽은 현장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봐야 뭐하냐'며 보여주지 않고, 그럼 같이 근무한 소대원이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하면서 어서 자식이나 데리고 가라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화장터로 가려했지만 부대 쪽에서 시신을 신고 나올 차도 내주지 않더라고요. 어찌 어찌해서 관광버스를 불러 그놈을 신고 나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관광버스를 불러 자식을 데리고 나왔지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올까 생각하니 이 나라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전국 군 폭력 희생자유족협회에 접수된 180여건(2001년 2월 말 현재)의 군의문사, 군 폭력 희생자 사건은 줄어들 줄 모른다.

한 해에 577명의 꽃다운 젊음이 피지만 채 꺾이는 것은 일제의 내무반 규율과 미국식 군사제도인 기만적인 병역제도가 뒤섞인 폐쇄적인 권위주의의 악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52년 동안 쌓여온 뿌리뽑히지 않은 악습이 군대 곳곳에 남아 있다 보니 그 유족들은 오죽하면 '이건 우리 군대가 아니여'라고 한다.

또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최근 부대 안에서 정훈교육 교재로 쓰고 있는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조그마한 녹색수첩을 살펴보자. 모두 12가지 항목으로 80쪽 정도가 된다.

1. 세계는 불타고 있다.
2. 북괴의 전쟁 도발 위협
3. 북괴의 위장 평화 공세와 대남 도발
4. 실패한 체제, 신음하는 북한 주민

5.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 포용정책
6. 북괴군은 우리의 주적, 싸워 이길 수 있다.
7. 주한미군은 왜 필요한가?
8. 통일의 참다운 뜻은 ?
9.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10. 좌경용공세력의 실체와 위협성
11. 민족 수난의 역사와 국방의무
12. 민주시민의 책임과 의무

이들 교재는 비디오로도 만들어져 대대급은 물론 중대까지 비치되어 있다. 정훈교육의 핵심은 책이나 비디오의 내용을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가에 맞춰진다. 따라서 사병들에게 매주 바뀌는 주제별 교육내용을 달달 외우게 한다. 급기야 서로 경쟁하듯 암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우방은 누구인가, 남북한 전력비교 등을 주입시키고 늘 우리 군은 우세하다고 교육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로 전시에 미군이 예비탄 70%를 대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도 등장하는 것이 한국군대의 교육현장이다.

군 의문사를 막는 방법은

52살 먹은 한국군대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사병들의 아름다운 꽃이 피다 말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군의문사라도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부대 안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군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한편에서는 일부군대에서 구타 없는 분위기를 만든 선임병들의 전통을 잘 이어 나가야 한다. 자기가 선임병이 되었을 때 구타근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 그래도 구타가 있을 때는 바로 신고하고 구타자의 징계와 타부대의 전출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휘관에게 구타근절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을 대비해 주변의 동료사병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많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뒷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 사람의 증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료사병은 현장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유족들과 면담할 때 언제든지 양심적인 증언을 하도록 한다. 부대 안에서 양심적인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군인들도 포함되어야) 시급하다. 휴가 때 군 폭력의 상황이나 인권침해사례를 인권단체, 신문사, PC통신, 인터넷에 제보하고 폭 상황의 시작과 끝을 육하원칙에 따라 잘 정리하는 습관을 갖자.

한편 인권단체들과 유족은 군내 사망 사고만큼은 민·군 합동의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수사하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또 현재 논의되는 국가인권위원회보다도 특별조사권을 가진 시민단체와 국회로 이루어진 강력한 인권위원회가 그 대안의 하나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망사고 진상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에서는 제일먼저 군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뒤 사단장은 사고 즉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알려 국회진상조사단이 즉각적으로 사고현장을 방문하도록 해 현장조사와 사고원인, 증인조사를 충분히 해 유가족이 사인을 납득하고 동의할 경우 장례를 치른다.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명예회복, 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희망의 군대를 향한 몸짓

거대한 공룡 한국군대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10.12일 북미공동성명에 이은 머지 않은 북미간계의 정상화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민족이 자기민족의 문제로 대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쾌거였다. 신문 1면 머릿기사엔 '이제 전

쟁은 없다.'라는 아기 손바닥만한 만한 크기의 글씨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다. 남한의 군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주적'인 인민군 육해공군의 사열을 받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서로 힘껏 껴안은 사건으로 남한 사회전체는 충격에 빠졌다. 5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제일 충격에 빠진 곳은 국방부였다. 주적이 혼란에 빠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럴수록 국방부는 한민족 차원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두 번 세 번 잘 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평화롭게 공존 공영하자는 분위기와 공동선언에 대한 전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과감하게 '주적개념'을 없애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족인 북한의 한 병사는 이제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는 병역의 의무라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시기이다. 누구보다 군대의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과 남한이 북한과 정치·군사적으로 적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사병들에게 "북괴군은 우리의 주적, 싸워 이길 수 있다."며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한 한국군대의 징병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

한국군대의 징병제도의 반통일적인, 반민주적인 폭력성이 군의문사와 군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지금도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군대의 징병제도는 단순한 병역문제가 아니다.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는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함께 하는 정치·군사적인 핵심문제로 평화통일로 가는 길 한가운데서 중요한 군축문제중의 군축문제다. 병역감축과 무력감축, 국방비감축과 함께 우리사회를 민주적으로 개조하며 모든 부분을 장상적으로, 제자리로 돌리는 중요하면서도 평범한 주장이다. 그 노력의 한가운데 있었던 군인들을 살펴보자.

1980년도부터 살펴 본 사병과 장교들의 자기권리 찾기 운동

한국의 군사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양심적인 사병장교들의 몫이다. 양심적인 사병장교들의 20년간의 자기권리 찾기 운동은 가시밭길이었다. 양심적인 군인들은 80년대 들어 하나, 둘 감옥으로 향한다.

먼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아람회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으로 황보윤식 공군대위, 김 난수 육군대위가 감옥으로 향한다. 아람회의 '아람'은 김 대위의 딸 이름이며 당시 검찰이 아람이의 백일 잔치에 참가한 동료, 선후배, 이웃 모두를 '반국가단체 구성원'들로 둔갑시킨 웃지 못할 사건이다.

97년 5월 18일 살림터 출판사에서 나온 정치범 명예회복협회의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라는 책을 참고해보자.

“내가 강원도 최전방 GOP군무 설 때 어느 날 밤 철책선을 따라 경계순찰 중 나는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다가 문득 '윤동주의 별'을 발견했다네. '조그만 땅덩어리, 그나마 분단된 조국, 같은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며 ... 정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렇다.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저 광활한 만주벌판 끝 하늘 밑에서 군무하며 참다운 군인의 길을 걸으리라'는 군은 맹세를 하였지.”

김 난수대위(ROTC 15기)! 73년 소위에 임관한 뒤 서울 근교 사단에서 소대장으로 군무를 시작해 중위로 진급해서 강원도 최전방 GOP군무 중에 참다운 군인의 길을 걸으리라 맹세했다. 그러나 1981년 8월 27일, 5공 초기 대표적인 반국가단체조직 사건인 아람회 사건으로 구속된다. 그는 몇 년 동안 감옥 안에서 쇠창살사이로 '윤동주의 별'을 보아야 했다.

공군대위 황보 윤식! 그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로 긴급조치 9호에 걸려 옥고를 치르다 79년 10·26사태 뒤 석방되었지만 81년 7월 16일, 같은 아람회 사건으로 구속된다. 당시는 대전·공고 교사였다. 83년 12월 23일, 2년 5개월 동안의 투옥생활을 마치고 '형집행정지'로 성탄특사로 출소. 현재 인천생활협동조합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아람회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진실은 계속된다. 사병에게도 한국판 드레퓌스는 계속된다. 계속되는 의문사사건과 함께 5공화국 당시 군대 안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자주적인 움직임이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을 서서히 이겨내면서 일기 시작했다.

1982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고등 군법회의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이태곤, 최태식 상병은 '진실의 아들'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1982년 11월 27일 민주구국투쟁 선언문이라는 유인물 60매를 제작하여 소속부대 화장실에 부착하였다는 죄목이었다. 최씨는 재판에서 "사병의 현실인식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고 진술한다.

장교, 사병들의 양심선언운동

폐쇄된 군의 울타리에서 양심선언을 한다는 것은 일단 용기가 필요하다.

당시의 양심선언 사병들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세대사병인 셈이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군인이었을 뿐이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더 가슴이 뜨겁게 반인간적인 군사제도의 변화를 바랬고 나라와 군대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가슴아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온 몸을 던진다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당시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지금 뒷사람의 길이 되고 있다.

광주에서 전두환의 계엄군에 총부리를 들이 던 김 병장의 거사가 있었다면 서울에선 방위병 김종태 이병이 있었다! 군대를 둘러싼 객관적 조건이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좌절과 함께 공포 일어붙었다. 서울에는 80년 6월 9일 계엄군이 거리거리마다 살벌하게 눈알을 부라리는 죽음의 지대 속에서 군사정권의 노골적인 집권욕모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한줄기 불빛이 타올랐다. 군사정권에 온몸을 불사라 항거하는 노동자 출신 방위병 김종태³⁾이었다. 불꽃으로 80년대 변혁운동의 물꼬를 죽음으로써 터놓은 국방노동열사였다.

김 병장과 김종태의 죽음을 넘어 87년부터 시작되는 군인·전경들의 양심선언은 저항을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사람의 입장을 지키면서 반민주적, 반인간적 군대질서의 민주적 개조에 초석이 되고 있다. 1987년 이후는 자주를 노래하고, 민주를 춤추며, 통일에 생명을 거는 위대한 전통을 마음속에 간직한 이 땅의 청년·학생들이 지나간 단절의 역사를 닫고 군대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시작했음이 이어지는 양심선언들을 통해 확인된 해였다.

<표11> 군인양심선언일지⁴⁾

3) 박래군, 「죽은자와 산자의 대화」, 「연세」 지 30집, 1990 겨울, 연세대학교 266쪽

4)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90인권주간 자료집」

계급	성명	소속	사건개요	현상태
중령	임택준	육군본부	88.7.7 대통령에게 군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위한 31개항의 고발문 제출, 군인권의 무법자를 고발	
대위 중위 소위 소위	이동균 김중대 이청록 박동석 원균경	30사단 중대장 30사단 소대장 " 30사단 공사장교	89. 1. 5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명예선언을 하고 이후 구속	기소유예로 석방되어 불명예 제대로 전역
일병	정광민	수방사 헌병단	88. 6. 8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연세 대학사회관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수배중. 민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구속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등으로 4년을 선고받고 복역 뒤 출소
일병	박길남	보병 제35사단	88. 1. 7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군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민주군대쟁취투쟁위에서 활동 중 구속	복역 뒤 출소
일병	김상철	공군 제1전투비행단	88. 11. 18 한교협 인권위에서 군의 비리 폭력 등을 척결하자고 주장 후 민주군대쟁취 투쟁위원회에서 활동 중 구속	
일병	서영완	보병 제28사단	89. 4. 17 한교협 인권위에서 군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양심선언 후 민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에서 활동중 구속	복역 뒤 출소
이병	장문걸	공군본부 (방위병)	89. 6. 3 전대협에서 군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군의 비리와 폭력을 폭로하는 양심선언	
이병	류범희	보병 제32사단 (방위병)	전대협에서 양심선언	
상병	서준섭	군수사령부	90. 7. 27 전대협에서 국군조직법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10만 이하로 병력 감축 등을 주장하며 양심선언	
이병	윤석양	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받고 90년 10월 4일 한교협에서 인권위에서 양심선언	복역 뒤 출소, 결혼
중령	손대희	육군 사단대대장	9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보름 앞두고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사퇴촉구 양심선언	근무지 무단이탈 및 정치관여금 지위반으로 1년 형을 선고. 98.10. 1 일 가석방으로 풀려나

양심선언 사례에는 아래 양영진 열사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울부짖는 경우도 있고, 수배생활과 고문, 투옥을 각오하고 근무지를 이탈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는 동안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혹은 감옥을 각오하고 국민들에게, 전우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그토록 뜨겁게 말하려 했는지 생생히 알아보자.

이 시기 87-89년도에 방위병들의 정치적 자살과 군대내 민주화투쟁의 바람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국군인, 방위병들의 조국통일과 군자주화,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 수 있다.

양영진 이병을 기억하는 사람은 장재완 일병을 잊을 수 없다. 양영진·장재완 추모사업회가 부산에 있다. 방위병장 일병(부산대)도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그는 87년 3월 27일 부산의 가까운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다. 방위복무

중 버스에서 잃어버린 가방(조직에 관한 자료, 문건이 들어있었음)이 보안대로 넘어가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죽을 때까지 조직보안에 관한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한달 후인 10월 10일에는 양 영진 이병(당시 22세)의 투신자살을 접해야 하는 비통함이 있었다. 지리산 오른편에서 태어난 '문학청년' 양 이병은 어머니를 애뜻하게 그리며 시를 많이 썼다. '어머니의 손톱'은 대표적인 시다.

꽃처럼 몸을 던진 양영진 이병

1988년 조국순례 대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 다니던 양영진 이병은 8월 8일 입영통지서를 받고 8월 10일 입대하였다. 하지만 그 해 10월 10일 부산대 공대 건물에서 스물 두 살의 나이로 몸을 던졌다.

“저의 충구는 언제나 북한 동포, 그리고 남한 민중 구체적으로는 어머니, 형님, 그리고 동지들에게 겨냥되어져야 했습니다. 이 반역의 충구, 패륜의 충구에 의해 저는 가슴에 무수한 총알을 맞으면서 어머니의 편안한 미소 같은 아침 햇살이 퍼져오기를 발길 돋우어 기다렸습니다. 매일 새벽은 찾아오지만 허한 얼굴로 쓰러지는 그리움만 M16소총의 섬뜩한 느낌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자주 인내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이라도 참고 견디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인내심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일방적 복종심의 습성을 배양하여 기계적인 현실 체념주의형으로 만들고,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정권에 가장 잘 순응하는 인간형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현 사회 내에서 민중의 자주성이 유린당하지 않는 곳이 없겠지만 군대는 가장 구조적으로 인간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군대조직 해체하라!.....

통일염원 44년 10월 9일 양영진 드림“

그의 죽음은 일제 군국주의 잔재물로 태어나 온갖 비리, 구타, 가혹행위가 횡행하며 수많은 의문사로 일룩 지워진 군대, 미래를 짊어질 엔 세대 사병들의 건강한 의식을 마비시키는 군대, 온 거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군 지휘관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한국군대에 대한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군대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는 군대 바로 세우기에 대한 책임을 살아남은 자들에게 온 몸으로 말했던 것이다.

그 뒤 차례로 88년 11월 공군의 김상철 일병, 89년 1월, 4월, 6월의 박길남, 서영완 일병, 장문걸 이병 등이 거대한 군의 부정부패, 비리, 폭력 등을 폭로하면서 민족의 군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전투 경찰 내에서도 붓물 터지는 군인들의 양심선언 못지 않게 시위진압 거부와 전경해체를 주장하는 그들의 양심선언이 줄을 이었다. 89년 1월과 6월 사이에 조규봉 이경, 임성호, 유진태, 이하일 일경, 유성호 수경 등 백골단 6명의 집단 양심선언 등이 그것이다. 이같이 89년 상반기는 가히 폭발적인 군경 양심선언(군인 8명, 전·의경 10명)으로 군대와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들의 뜨거운 의지를 국민들과 전우들에게 보냈다.

다른 한편으로 88년도에 접어들어서는 군민주화투쟁 바람이 폭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어났다. 88년 4월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지제군」 5이라는 유인물에서는 사병들의 민족의식을 통한 의식화, 조직화작업의 촉구와 방위병들의 경우 각 지역에서 지역운동과 함께 군을 민족의 군대로 그리고 국민의 편으로 돌려세워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었다.

너희가 '전우의 함성'을 아느냐?

5) 자세한 내용은 전교학신문 91년 1월 16일자 「급진좌경세력의 군경침투활동과 대책」 참조

그해 9월에는 현역 군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매국군인 몰아내고 민주군대 이룩하자”는 내용의 ‘전우의 함성’⁶⁾이라는 유인물이 군부대가 밀집한 의정부에 대거 뿌려진 것이 발견되어 군의 자주화,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9월 6일 오후 8시경 의정부 터미널 부근에서 발견된 이 유인물에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충정훈련거부 *동족을 학살하고 정권을 강탈한 매국군인 처단 *분단체제 강요하는 미국축출 *군사대결 조장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거부 등의 주장이 담겨있었다.

이 같은 유인물이 대량 뿌려진 것이 확인되자 의정부의 경기 북부 민통련 관계자들은 “오래 전부터 사병을 중심으로 군대 안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있어온 것으로 알고있다”며 앞으로 군의 민주화를 위한 이 같은 운동이 퍼질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양심선언의 형태는 대중과 함께 하는 운동이기보다는 소수의 선도적인, 일회적인 운동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양심적인 애국군인들이 군민주화와 사회민주화투쟁에 참여하는 하나의 형태로서 중요한 뜻이 있겠다. 또 다른 하나는 88년도부터는 군 입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싹트면서 ‘군과 병역문제’를 다시 보자는 바람이 불기도하였던 것이다. 그 흐름으로 전국적인 청년학생들의 각급 교지와 단행본 등에서 군 입대에 대한 문제제기, 제대자들의 군 생활체험 등을 위주로 한 논문 20편 정도가 실려진 시기가 바로 이때이며 이들 논문에서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사병들과 함께 술선수범과 진실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군대로 바로 보기 시작했다. 청년의 황금기를 썩어 돌아오는 허송세월의 3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군대의 아픈 곳을 고쳐나가는 군복무기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눈을 강조하고 있다. 이 흐름은 이후 90년대 일부 단위에서의 병영학교와 전국적인 강제집집철폐투쟁, 예비역복학생들의 자주적인 예비군 훈련, 민방위훈련 개혁투쟁으로 드러난다.

중령의 양심선언과 89년 군 명예선언, 그리고 윤석양

중령이면 사병들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뻘이다. 왜 그런 위치에 있는 군인이 양심선언을 했을까.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대통령께 고발.... 군대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오히려 은폐 조작하는데 만 급급, 만일 이러한 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역사의 독버섯이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되고 말 것입니다.” (임택준 중령 양심선언문 중에서)

88년 7월 7일 육군 본부에서 근무하던 육사(32기)출신 임택준 중령은 대통령에게 군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31개항의 고발문⁷⁾을 제출하면서 군 인권의 무법자들을 고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후 군 생활 17년을 타의에 의해서 마감하였지만 많은 후배 장교들과 육사 선배들의 위로와 지지 속에서 양심선언 출신 고급장교로서 군민주화를 향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다.

89년 1월 5일 모진 탄압을 눈앞에 두고 군의 부당한 정치간섭과 불의에 대한 맹종을 단호히 거부한 이동군 대위 등 5명의 초급장교들의 군 명예선언 발표는 우리에게 철옹성으로 보여졌던 군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하였고 이것은 사병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임택준 중령의 양심선언과 함께 장교들까지도 군민주화운동에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들은 ‘군 명예선언문’에서 군을 불명예로 이끌어온 정치군인들의 반성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면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나 육군본부는 1월 9일 이들을 군형법상의 명령위반 및 정치관여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그 후 이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다음 이동군 대위와 김종대 중위는 파면하고 나머지 장교들은 3개월

6) 「민중의 소리」 1988. 9. 30 일자 6면 참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7) 자세한 내용은 말지 91. 3월호 184-187쪽 참조

간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애국적 군인들에게 새겨진, 장엄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군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강한 용기와 신념은 군 당국의 고도의 탄압(두 장교의 불명예 제대, 김종대 중위에 대한 89년 3월 16일의 노상 테러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많은 군인·전경들이 집단적이고 대담하게 군대를 바로 세우는 대열에 속속 동참하게끔 하였다.

군대와 경찰을 바로 세우려는 양심선언은 이어진다.

89년 5월 8일, 부산 동의대 사태 진압에 나섰던 황원진 수경을 비롯한 6명의 '무시무시한' 백골단들이 평민당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동의대 사태 진상규명과 경찰의 중립화를 요구하였을 때 재야 단체와 대학가 등에서의 연대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하여 갔다. 그러나 한달 후 89년 6월 8일 경찰민주화와 전경해체라는 민주적 지향과 요구를 앞장서서 실천해오던 전경해체투쟁위원회의 노재학 상경이, 9일에는 연성흠 일경이 각각 연행되었으며 7월 31일에는 양승균 일경도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잡혀 구속되었다. 이후 90년 12월 14일, 18일에 연성흠, 노재학 씨는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하였고 양승균 씨는 91년 4월 출소하였다. 양 씨는 87년 1월 8일 전경 사상 최초로 양심선언을 산 증인이다.

양심적인 장교와 사병에 이은 백골단 6명의 집단적 양심선언은 전경, 백골단조직 자체 내에서 집단적 운동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였으며 구타로 날이 새는 전경내부의 비인간화를 거부하는 자주적, 양심적 인간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89년 3월 2일의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의경 80여명, 9월 1일 인천시경 소속 의경 1백30여명이 집단적으로 '시위진압 동원 반대와 인격적 대우'등을 요구하며 가두로 진출한 것 등에서 전경들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는 대담한 행동을 보여 주었다.

90년 가을 한 보안사(현 기무사) 이병이 국방부장관을 물러가게 한 사건이 터진다. 이름하여 '윤석양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이었다. 윤 이병도 신세대사병이었던 모양이다. 보안사를 탈출할 때 '디스켓'에 민간인사찰자료를 담아 나와 보안사를 두 손들게 했다.

90년 가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활동과 고도화된 녹화사업!

양심적인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정치보복적인 탄압은 "기무사의 대국민 사찰, 강제징집⇒사병들에 대한 기무사의 기초조사 감시통제, 녹화사업, 프락치 강요⇒의문사, 군과 관련한 각종 조직사건의 조작, 수많은 녹색인간(프락치)의 창출"이라는 일련의 탄압 순환장치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91년 벽두부터 기무사와 경찰정보기구의 사찰활동, 폭력적 탄압의 휘파람은 그 진가를 발휘하여 2월의 외대생 남현진 이병, 서울대생 송종호 일병의 의문사사건, 4월 15일의 최홍기 이병의 녹화사업폭로 양심선언 등으로 나타나 기무사의 정치보복적 탄압은 쉴 틈이 없었다.

그러나 기무사의 이 순환장치에 반대해 군의 민주화를 원하는 세력들과 청년학생들은 기무사의 불법사찰과 의문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애국군인과 군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91년도에는 6공식 강제징집을 거부하면서, 모순 투성이인 병역법과 노동악법을 개폐하려는 방위산업체 해고노동자와 강제징집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병역제도개선 요구로 펼쳐 일어났다. 그리고 89년 상반기의 집중적인 양심선언보다도 더욱 집중된 양심선언이 전개되는 91년 4~5월에는 강경대 열사사건을 계기로 민중들의 자주화, 민주화투쟁이 꽃피는 시점에서 같이 공동걸음을 걸어가는 성숙함을 보인다.

양심적인 군인들을 지원하며

불법조직 백골단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강경대열사 사건 이후 범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공안 당국은 선도적 학생운동과 군사투쟁활동을 빌미삼아 91년 6월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 조직'사건으로 52사단 김용명 이병의 4명, 청주대 '자주대오'사건으로, 화천 27사단의 권영환 병장의 4명,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연구원 구속사건'(이하 서사련)으로 단기병 이창희의 3명 등 다종다양한 군 조직사건을 전국적으로 만들

어 나갔다.

군 당국의 발표를 요약하면 '민족해방활동가조직'사건⁸⁾에서는 이들이 "현역사병으로 군복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과 뒤 군대내의 동료들 대상으로 사상지도 등의 적극적인 군부투쟁활동을 획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청주대 자주대오'사건에서는 '학군연계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동료사병들에게 주체사상을 선전하거나 반미 이적활동을 해왔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또 서.사.련 사건은 그 누가 보더라도 군 당국의 무리수로서 이미 군입대 전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도서를 문제삼아, 학문과 사상의 자유까지 짓밟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악용한 수사기관들에 의해 제대 2, 3일을 앞두고 구속되었던 것이며, 자주대오사건의 고성외의 25사단 송재봉 이병의 경우는 입대하자마자 아무런 혐의도 없이 기무사에 의해 구속되는 등 기무사의 불법연행, 고문, 구금 등 불법적 정치공작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것은 한마디로 군 수사기관이 민족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시기 때마다 병역의 의무를 제물로 삼아 조직사건을 만들어 내, 90년 이후 군의 정치적 개입을 일상적인 위협수단으로 교묘히 활용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다.

진정 전경, 의경도 주인으로 떨쳐 일어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90년대는 군대와 준군사조직인 전경·의경사회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났다.

90년 들어 3월 20일 종로서 소속 의경 15명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반발하여 집단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고, 6월 2일에는 부산시경 소속 전경 2백 여명이 부대해체 후 타 근무지 배치에 반발, 강력 항의하는 등 대중적 운동은 끊임 줄 몰랐다.

90년 10월 윤석양 사건을 계기로 90년대 군민주화 지원운동의 구심으로 등장한 윤석양 후원사업회(90년 12월 준비위원회 발족)는 양심선언 군인·경찰 출신자들과 그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진영과의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해체기무사!, 쟁취 군민주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각종 군 조직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족들의 법정투쟁을 지원하고, 91년 4월 강경대 열사 사건 이후의 폭발적인 양심선언투쟁을 교훈으로 군민주화 홍보매체와 소식지로서 「군에 의한 민주화 운동 탄압 실태」, 「군경인권소식」 지를 처음 발간하게 된다.(91년 7월 첫 회 이후 매월 1회 발간)뿐만 아니라 각종 군경의문사의 진상규명과 군경양심수석방투쟁, 강제징집 철폐투쟁 등을 지원하는 등 군사주화, 민주화운동을 필요로 하는 대중들과 온 몸으로 하나가 되어 군사주화, 민주화운동의 일대 모범을 만든다.

예비역 대학생,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또 예비역들도 구경 만하고 있지는 않았다. 어제의 용사들이 나섰다. 길을 비켜라. 당시 예비역들은 도서관에서 고시준비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86-87년 문무대. 전방임소 철폐투쟁을 교훈 삼아 90년부터 불기 시작한 자주적인 예비군훈련 쟁취투쟁과 그 해 10월 42주년 국군의 날을 주체적으로 맞이하고자 했다.

전국적인 예비역 복학생들의 군의 자주화, 민주화, 비핵군축을 위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성과로 91년 4월 연세대에서 「병영학교」가 최초로 열렸다. 이를 모범으로 경희대 수원캠퍼스, 조선대, 전북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예비역 복학생협의회(만우리)가 주축이 되어 군입대자들에 대한 군에 대한 올바른 소개와 병역법안내, 모범적인 병영생활 등을 제시하였다. 91년 2~3월 남현진 이병과 송중호 이병의 의문사사건을 계기로 전국대학생기자연합에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민주화를 위한 공동기자단」 구성을 통해 공동취재활동을 했다. '군대 죽으로 가는 곳입니까?'라는 기획광고와 '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공동취재기사가 연재되기 시작했다. 이는 인권현실과 함께 '청년과 병역문제'가 이제 청년학생 모두의 공동의 문제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했다.

당시 눈길을 끄는 것은 90년 7월 17일 군수사령부 탄약사령부 서준섭 일병이 양심선언을 했다. 그 내용은 국군조

8) 자료집 「군에 의한 민주화운동 탄압 실태」, 민가협, 윤석양후원사업회의 3개 단체 발행

직법폐기,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수, 평화협정체결, 남북군사력의 10만 이하로의 감축, 가혹한 군사훈련과 사고로 사망한 모든 군경들에게 보상비 지급을 요구했다. 또 91년 8월 대구대 손석용 이병의 살신성인이 있었다. 그는 자기 학교 4층 옥상에서 분신투신자살을 하면서 '조국통일, 미국의 용병이 되어 동포의 가슴에 더 이상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 라는 유서 남기면서 산화해 갔다. 이를 계기로 애국군인들의 군자주화, 민주화투쟁과 청년학생들의 비핵 평화군축 투쟁이 접목되면서 한반도의 전쟁위험과 과도한 군사력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애국군인들의 절규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양심적인 군인들이 바로 비핵평화 군축운동의 한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비핵평화 군축운동은 군의 자주화, 민주화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윤석양 후원사업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양심선언 군경 지원대책위원회로 새로 태어났다. 강경대 열사 사건당시 군경의 양심선언은 몰밀 듯 터져 나왔다. 전·의경들인 박석진, 김대영 군인들인 이동익, 고대성 일병이 군대와 경찰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부대를 나와 오랫동안 쫓기는 몸이 되었다. 양심선언 군경 지원대책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회관에서 기나 긴 농성을 정리하며 그들은 군복대신 수의를 입어야 했다. 93년 7~9월경에 그들은 감옥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90년대를 여는 이지문 중위 사건과 군인들의 단결

...아침 조간신문에 실린/ 한 젊은 장교의/ 양심선언 내용은 / 공개투표를 하였고/ 특정후보 찍기를 강요받았다는/ 그리고 개표 후 결과를/ 해당 부대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려 했다는.../ 같은 날짜 국방일보에는/ 외부에서 불온 사주를 받아/ 근무지를 이탈한/ 젊은 장교의/ 탈영사고 기사가 / 실려 있었다

편해문의 시 '양심선언'의 일부이다. 92년 5월! 군인의 권리 찾기가 시작되었다.

92년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두고 군 부제자투표 부정을 폭로한 육군 제9사단 이지문 중위의 용기있는 양심선언을 시작으로 우리군의 역사상 최초로 광범위한 애국장교, 사병들이 스스로 주인으로 떨쳐 일어났다.

그것은 군 부제자투표 부정폭로로 나타나 사병과 장교들의 인격과 정치적 제 권리를 보장하라는 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폐쇄된 군대의 서신검열과 소지품검사의 벽을 허물면서, 누구는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익명의 전화로, 생생한 병영일기로, 신문 제보로, 면회장소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군 부제자투표 부정폭로를 펼쳐내는 등 대중운동의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며 90년대 군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그것은 9사단뿐만 아니라 1사단, 5사단, 7사단, 12사단, 26사단, 30사단, 52사단, 57사단, 60사단, 수도방위사령부, 2군사령부 수송연대, 3군사령부 예하부대, 육군통신사령부, 육군기술병과학교, 공군3579부대, 해병2사단 등 육·해·공군 전군에서 거대한 물결기로 흘렀다. 애국군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리를 지키고자 선거부정과 무법행위가 횡행하는 '병영'에서 그들의 요구를 부르짖으며 민족군대, 국민의 군대를 향해 자기 몫을 찾아 나섰다.

뿐만 아니라 영관급, 장성급 예비역 장교들이 군 부제자투표 선거개입을 몸으로 실천한 국군기무사에 대해 그 능력과 임무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글인 「누가 군을 욕되게 하는가」 등을 한겨레신문⁹⁾에 투고하는가 하면 이 중위의 용기 있는 행동에 "멋뻐한 일 했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은 상급장교 등 중 하층 장교, 사병들과 많은 군인가족, 제대사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렇듯 군민주화를 바라는 뜨거운 동참이 거대한 파도가 된 적은 해방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나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을 무색케한 일부 정치군인들의 기무사를 동원한 치밀한 정치개입과 과잉충성은 민·군 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바라는 4천만 민중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공군방공포병사령부와 육군기술병과학교의 여당홍보 정신교육과 교육교재, 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의 기상천외한 전화를 이용한 대리투표, 군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입증하는 육군 3군사령부의 '건강한 부대관리'라는 제목으로 포장된

9) 한겨레 신문, 92. 4. 5일자 참조

총선과 대선을 대비한 선거지침문서가 공개¹⁰⁾되고, 일선부대에서 기무사요원이 부재자투표용지를 일괄수거¹¹⁾해 기무대에서 바꿔치기 했다.

장교, 사병들의 목숨과도 같이 귀중한 자주적인 주권의 한 표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그들 스스로의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더욱이 이지문 중위를 이등병으로 강등, 파면시켜 군복을 벗기고(나중에 기나 긴 재판을 통해 명예 회복, 현 서울시 광역 의원), 이원섭 일병을 기소유예 처분한 국방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는 높아만 갔다.

광주 학살로 민·군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9사단장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바로 그 9사단 출신 이지문 중위가 군의 생명인 명령과 기강의 상징인 자랑스러운 중위계급장 대신 이등병모자를 쓴 채 “자기 자신이 양심선언으로 군복을 벗는 마지막 군인이기를”이라며 국민을 향해 물었다.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무조건적인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장군과 군의 잘못된 현실을 고발하는 양심적인 청년장교와 사병, 이들 중 누가 진정 애국자이며 국가와 군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이지문 중위의 물음에 대해 처음으로 군·민 관계가 아닌 민·군 관계라는 말을 자리잡게 한 예비역 준장 표명열(전 육군 정훈감)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표명열 예비역 준장, 「누가 군을 욕되게 하는가」

표 준장은 92년 4월 5일자 한겨레 신문에 「누가 군을 욕되게 하는가」라는 글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중위의 양심선언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군대란 본디 정직을 생명으로 한다. 정직하지 못한 군인은 이미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것이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병영생활이라는 특수한 여건에 눌려 굴종적 타협과 좌절과 패배의 경험을 가진 병사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적과 싸울 수 있겠는가.”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휘말려 우리 군이 상처받고 불신 받는 일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차체에 반드시 강구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는 바램도 남겼다.

그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기무사의 역할을 엄하게 꾸짖었다.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무사의 역할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군을 진정으로 강한 민주군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또 국가 안보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기무사가 전문화를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정진하기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권력지향적인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의 기무사에 대한 비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문명한 어떤 나라의 군대를 보더라도 우리 군의 기무사처럼 지휘권 중심의 군 조직 기본원리마저 무시한 채 무소불능의 절대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연대급에 지원 나와 있는 기무사 간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연대장실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 자기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연대장의 근무태도, 동정 및 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연대장의 확인이나 진술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대로 자기사령부에 보고한다.”

기무사의 정지지향적인 역할이 결국 일선 간부들의 군 생활을 감시일변도라 지적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은 그 연대장의 승진·진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다. 얼마든지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간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항상 저자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한때 전체 육군의 정훈교육을 책임진 표 정훈감의 따끔한 충고는 이렇게 맺는다.

“나의 군 생활 중에 기무사 요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어떤 공식적 발언이나 문서도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이렇게 항상 옳고 완전 무결한 조직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빛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10) 위 신문, 92. 4. 24일자 참조

11) 위 신문, 92. 5. 5일자 참조

군을 바로 세우려는 역사는 도도히 흐르며 반복되는가.

13년 전 88년 7월, 육사(32기)출신 임택준 중령이 대통령에게 군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31개항의 고발문을 내며 양심선언 한 뒤 한번 강산이 변해 '제 2의 임택준'인 손대희 중령의 양심선언이 터졌다. 전방의 현역 대대장인 손 중령이 97년 대통령선거를 보름 앞두고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양심선언이 그것이다. 그는 이 양심선언으로 보직해임 돼 군법회의에서 근무지 무단이탈 및 정치관여금지위반으로 1년형을 선고받고 98년 10월1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99년 2월 호에 실린 월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병역기피의혹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중령이 10년 전 군 인권의 무법자들을 고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면 그는 병역을 기피하는 특권층에게 비판을 가했다. 그를 양심선언 하도록 마음을 울린 것은 한 사병과의 면담 중에 "누구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 이 추운 곳에서 고생하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 소록도에서 노래방이나 다니며 편하게 군 생활을 한다"는 말이었다. 감옥을 나온 그를 괴롭힌 것은 평생 군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손 중령을 조선일보가 시국선언을 '이적행위'라며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다.

임 중령의 육사 출신 군 생활 17년, 손 중령의 ROTC 19기 출신 군 생활 18년은 비록 타의에 의해서 마감되었지만 많은 후배 장교들과 함께 양심선언 출신 고급장교로서 군민주화를 향한 기나긴 여정은 희망을 앞두고 있다.

표 명령 준장의 따끔한 충고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에게도 이어진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이 총재가 표 준장을 비롯한 예비역 장군들에게 편지를 보내자 표 준장은 한겨레신문 2000년 1월 11일자에 기고한 '이회창 총재에게'라는 글에서 "그렇다면 혹시 이 총재께서는 과거 독재정부가 정권 안보를 위해 고문을 통해 조작한 간첩사건들, 억울한 의문사를 만들었던 많은 일들이 애국적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때가 좋았다는 향수를 느끼고 계신 것은 아닌지?...안보 역량 강화의 기초는 무엇보다 '살맛 나는 세상'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 '지도층 자제들이 앞장서서 군 문에 입대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손 중령의 선배(?)답게 이 총재에게 따끔하게 답장했다.

하늘같은 예비역준장의 따끔한 충고에 많은 예비역병장들이 독자투고를 통해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여준 것은 정치권의 외풍에서 군대를 바로 세우려는 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같은 신문 1월 26일자에서 최영환 씨는 표 준장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나는 예비역준장이 얼마나 높은지 모른다. 다만 우리처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멀게 느껴졌다..천히 그렇게 딱 부러지는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다. 이 총재는 이제 함부로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좋은 글을 쓴 표명령 예비역 준장께 고맙다는, 멋지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차분히 군대를 바로 세우려는 희망 섞인 대화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유는 양심의 목소리는 인간의 소리지자 하늘의 소리지기 때문이다.

10년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91년 「애국군인」 사건의 권대현

20세기의 무덤에 갇힌 자, 권대현을 아는가?

필자는 '송창식 노래를 좋아하던 털털한 청년' 애국군인 32살의 권대현을 소개할까 한다. 91년 「애국군인」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당시 「애국군인」 사건으로 국군 기무사령부와 군 교도소 생활 후 정신분열증에 간혀 지금껏 10년째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영문학과 88학번이었던 권대현, 대학 2학년 때 53사단 단기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동아리 선배인 서재호(33)씨 등 9명과 함께 '애국군인' 이라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91년 3월 21일 긴급 체포되었다. 이후 국군기무사에서 20여 일간의 조사를 받은 후 소위 '남한산성' 이라 일컬어지는 군 교도소에서 9개월을 복역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11월 출소했다. 출소 뒤 권 씨의 모습과 생활은 정상패도에서 멀지않게 비껴나 있었다. 영창에서 길들여진 기상, 취침시간에 맞춰, 방 안의 모든 물건은 군대식의 '각' 을 잡아 정리했다. 간단한 대화의 경우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곧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로 빠져들었다. 10년 가까이 여전

히 갇힌 수인처럼 살고 있다.

또 사라지는 개구리 군복

93년 11월~94년 군 구속자만해도 평화실현 학생연맹사건의 신평식 씨를 비롯한 3명을 포함해 15명이었고 95년에 52명, 96년에 54명, 97년에 47명으로 이때까지 모두 168명의 군인들이 구속되었다. 기무부대는 양심적인 군인들 164명을 군 교도소로 보내는 일에 솔선수범할 게 아니라 168명의 특권층의 군기피자를 군에 보내는 일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1996~7년도는 '민족해방군 조작 사건' 탄압을 중심으로 벌어진 100명이 넘는 양심적인 군인들에 대대적인 탄압의 해였다. 96년 가을의 북한 잠수정 출현의 여파로 사회와 군대전체를 바짝 얼어붙게 한 뒤 양심적인 군인들을 탄압하였다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는 1948년 여순항쟁 뒤 일어난 다음 해인 49년부터 한국전쟁직전까지 진행된 양심적인 군인들에 대한 대규모 숙군작업 이후 최대의 탄압사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1992년 이지문 중위 사건으로 폭발된 일반 사병들의 대중적인 군부재자 부정투표 폭로이후 96년의 연세대사건 진압과 함께 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탄압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은 물론 강원, 대전, 전주, 부산, 진주 심지어 제주까지 온 나라 곳곳에서 학생운동 출신 양심적인 군인들은 면회 길에서, 또는 내무반에서 잠자다 말고 영문도 모른 채 기무부대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갔다. 양심을 저당 잡힌 기무부대는 그래서 반공, 반복의 보루인 군대 안에서는 절대로 양심적인 민족군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 잡듯 잡았던 것이었다. 이는 거꾸로 그만큼 군의 자주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군대 울타리 안에서 양초처럼 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사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학생운동의 전력자들이 군 입대를 하였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시위 전력자는 곧 좌익이고 그것은 또한 군 내부와 적이라는 논리는 군대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며 국방부와 기무부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에 한치의 헛점이 없기를 바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기무사는 양심적인 군인들을 더욱 노골적으로 못살게 하기 위해 '로보캄'까지 갖췄다. 1999년 12월2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서 기무부대 소속 군 사법 경찰관의 수사 관할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법은 그동안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범죄에만 적용하던 기무부대의 수사관할권을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로까지 확대한 것이어서 모든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급기야 2000년 1월 3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은 '기무사 수사권 확대에 대한 논평'에서 "오늘날 남북교류협력법과 집시법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권을 확대한 것은 집회·시위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되는 권리를 누리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군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인권 유린으로 이어질 이번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발끈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는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엔지오'란 책에 쓴 적이 있다. 지금 한반도 사람들이 손과 발로 뛰고 싸우며, 머리와 가슴으로 함께 꾸어 온 그 꿈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것은 성공적인 남북정상화에 이은 북미관계의 정상화이다.

바로 한국전쟁의 교전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끝나는 문제는 한국 사병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한국군이 모든 구성원과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희망의 군대로 바로 설 것이냐 아니면 분단과 권위주의적인 군대모습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냐'하는 기로에서 있다. 필자는 '우리군대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라 확신한다.

군의 변화가 제일 눈부시다. 바로 한국군이 비로소 미국한테서 벗어나 군의 주인이 된다. 국민의 군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군이다. 그야말로 '함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사람냄새가 나는 군대, 토론이 있는 군대, 인터넷접속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1인당 한 대씩 있는 군대. 압록강 아니 만주벌판에서 보초와 불침번서는 군대. 155마일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인민군과 한국군이 말타기하고 강강수월래하는 군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리가 본 희망의 한국군대는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질적 첫 조치로 이름뿐인 유엔 사령부는 해체되고 미국한테서 전시 작전지휘권까지 실질적으로 되찾게 된다. 주한미군 철거를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군축이 이루어진다. 남북간의 불가침조약이 발효되고 남북합의서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된다.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으로 해체되고 한국군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사령부 개편계획의 역할분담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상호 방위조약 등의 한미군사동맹은 개폐되고 한국과 미국간에 서로 대등하게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조약이 만들어진다.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는 해체되고 서로 대등한 군사교류회의체만 가동된다. 한반도 내에서 '핵에 관한 법령'을 정해 외국군대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반입, 운반, 조립, 축적, 생산에 대해서 강력히 통제를 한다. 이제 한반도는 핵무기 실험장이나 연습장으로 혹은 핵무기 대리전쟁터로 사용하지 못한다. 남한과 북한이 지역별 비핵화대화선언을 한다. 강대국들의 핵은 먼저 폐기되고 특히 일본의 비핵화지대화를 요구한다.

둘째, 한국군의 주적 개념은 '동족'인 북한이 아니라 '외적'인 제 3의 적으로 바뀌어 남북한이 공동으로 안보를 지킨다. 통일군대로 바뀐다. 미·일·한 세 나라, 한·미 두 나라의 합동군사훈련은 중지된다.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불법적인 정찰은 중지된다. 휴전선주위의 대인지뢰, 대전차지뢰는 모두 없어진다. 미국군사학교에 한국군의 장교파견은 중지한다. 한국 국방부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은 사라진다. 노근리, 매항리, 제주 4·3학살 등의 박물관이 생겨 하루에 1만 여명이 전학한다. 휴전선과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문제에 대해 미군과 한국 국방당국이 전면조사한 뒤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사죄, 배상한다.

실질적인 군축이 이루어진 희망의 군대 분위기에 맞춰 남북한 군인들의 체육교류가 시작된다. 남북연합군대구성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고 공동군사훈련도 머지 않았다. 그 뒤 남북군인이 압록강에서 함께 보초를 서게 된다. 남북한의 연방군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한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합동 군사퍼레이드를 평양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일년에 두 차례 연다.

셋째, 전시 접수국 지원협정(WHNS), 한미행정협정(SOFA)등 한미 사이의 각종 군사, 행정조약은 철폐되어 필요 없게된다. 주한미군은 철수를 시작하고 그 동안 주한미군에 대한 총 지원비용 수 십 조원을 차츰 차츰 한국에게 돌려준다. 미군기지의 한국인 노무자는 한국정부가 주선한 직장으로 돌아간다. 관세 및 과세 특례된 세금은 미국에 소급 징수한다. 미군이 그 동안 불법 점거한 8천만 평 이상의 미군 공여지를 전면공개하고 돌려 받는다.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를 비롯한 군산 등의 미군기지 철수와 함께 그 지역은 주민들에게 돌려지고 평화적으로 사용되며 최대의 오염지역인 미군주둔기지를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데 미군이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기지주민들에 대한 피해배상은 미국이 즉각 실시한다. 과거의 11만 건의 주한미군범죄는 전면 재조사되어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희생자들에게 미국이 배상을 하게 된다.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한다. 주한미군범죄는 영원히 사라진다. 당국의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이 발표되고 기지촌을 특별지역으로 선포해 건전하게 개발한다. 한국이 군사협상과정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에 임하게 된다.

한·일 군사협력은 중지된다. '한국 국방부'의 이름으로 일본의 성적노에 '군대위안부'의 진상규명, 사죄, 배상을 일본 방위청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각 부대 '정신교육관'에 일본의 성적노에 '군대위안부' 할머니들의 영정을 걸어놓고 다시는 외세군대에 '민족의 자궁'인 여성들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마음에 새긴다. 전범국 일본 국왕의 방한은 있을 수 없고 일본의 완전한 과거청산이 있는 뒤 다시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본다. 전범국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은 저지된다. 일본에 끌려간 징병, 징용, 근로 징신대, B·C 급 전범, 문화재(금괴를 비롯한), 재일교포 지위

문제도 해결된다. 남북한이 유엔을 미국주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자리잡도록 돕는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외교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 독도에 일본의 순시선이 얼씬거리지도 못한다.

넷째, 획기적인 군축과 함께 국방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어 무기도입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쓸데없는 도입은 줄어들고, 미국무기 구매강요는 사라져 해외무기구입이 줄어든다. 과거의 무기구입과정은 '무기청문회'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진상규명된다. 미국도 다른 나라와 함께 동등하게 무기구매과정에 참여한다. 무기거래상은 많은 부분 공개되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무기구입과정의 부정커미션, 리베이트는 없어진다. 미국에 지불한 무기기술도입시의 로열티를 전면 공개한다. 미군방위분담금, 주둔부담금을 비롯 각종 무상지원내역을 공개한다. 미국 항공모함의 한국입항은 거부된다. 미군이 지난 시기 불법적으로 들여온 PX물품 품목을 공개한다. 과거 미군 골프장의 본국 송금액을 공개한다. 부패'특권'신분증 미군속 신분증은 즉각 폐기한다.

미국반성의 날을 정해 미국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참회하는 날로 한다. 한국전쟁 때, 그리고 정전체제하에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크고 작은 군사충돌과정에서 생긴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합동위령제와 합토제를 판문점에서 지낸다.

홍치산 시인은 희망의 그날을 「통일 그날」이란 시에서 노래하고 있다. (홍치산, '10분사랑', 두리.96. 2. 25)

전 세계 기자들 후레쉬 터져 / 휴전선이 무너지고 지뢰가 뿔뿔히었다 / 비무장지대엔 미군 훈련포탄 대신 축포가 오르고 / 대남 대북 비방 소리 통에 통일 행진곡 / 조선은 하나다. 심장이 뛰고 / 소리치며 아우성 치며 달려와 안기는 / 동포의 뜨거운 포옹이 가슴 터지게 껴안을 때 / 서서히 현실임을 알았다 / 형제부모를 만난 이산가족 / 아직도 믿기지 못한 사람들 / 자기 살을 꼬집고 나서야 환호성을 질렀다 / 세포 구석구석 환희로 기질할 것 같고 / 씩씩이도 푸져 누구든 집에 있는 술과 음식 / 마구 내놓았다. 노동자 학생 농민 / 남과 북의 풍물패들 수 만 명이 축포소리에 맞춰 밤을 새워 / 일렁이고, 풍물치다 지치면 팔도 아리랑을 불렀다. / 수경이 누이가 단상에 올라가 인사를 하고 / 그간의 모오든 수난도 다 씻어버리고 오로지 / 기쁨으로 터질 듯한 눈물

놀다 지치면 하나 둘 이름도 몰랐던 동포들 / 서로 자기 집에 가자고 / 이남 노동자 농민 이북 노동자 집에 가보기도 하고 / 공장에도 가보고 농촌에도 가보고 / 이북 노동자 현대 조선소에도 가보고 / 이북엔 이게 좋구나 / 이남엔 이런 것이 좋은 거구나 / 우리 노동자가 힘을 합치면 / 우리 농민이 힘을 합치면 / 농산물 외국에 의존 안해도 된다 고 / 전세계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다고 / 떠오르는 동해 해돋이 여명을 보며 무쇠 팔뚝 굳게 껴안았다.

한국군대의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하여

민족의 군대의 군민주화 내용은 더욱 보기 좋다.

군을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군의 민주화」의 내용은 군이 극소수 정치 지향적인 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비민주적인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병사들과 초급장교들의 민족 의식, 민주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인격적, 정치적 권리를 찾는 의식을 형성하는 자발적인 토론이 시작된다. 특히 군을 구성하고 있는 사병, 하사관 양심적인 직업군인, 군무원들은 물론 그 가족, 애인, 제대군인들이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세우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첫째, 군의 정치적 중립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전체되어야 할 것은 한때 외세와 손잡고 군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았던 극소수 군부세력들은 나치에 부여한 자들의 과거 청산처럼 영원히 단죄되고 그들이 저지른 추악한 무기 도입비리, 국방예산 낭비, 병역비리와 양민학살, 군 의문사 등은 전면적으로 밝혀진다.

군대내 성폭력 행위자는 구속하고, 성폭력 백서에 실리며 군대내 성폭력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

자들의 권리는 인정되고 집총거부, 군사훈련거부 등 양심의 권리는 보장된다. 정치적, 종교적,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한 탄압에 대해 군당국의 속죄와 배상이 이루어진다.

각종 비리 백서가 발간되어 진중문고에 비치한다. 군수물자도입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해 공사입찰, 군납품에서 각종비리는 사라진다. 남대문시장에 군화, 대검, 수통, 총기류등 군수보급품이 돌아다니지 않게 된다. 부패무능한 군지휘관에 수여된 상훈을 되찾는다. 그 뒤 중립적인 군부와 정당, 주민, 사회단체 대표로 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군의 정치군인화를 막고, 사병을 개인적으로 부려먹는 私兵化현상을 막고 권위주의체제를 벗어버리기 위함이다. 군의 헬기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사회조직으로서의 군은 봉건적 잔재를 없애기 위해 닫힌 문을 열고 예산, 조직, 운영에 있어서 세세한 내용까지 공개의 원칙을 지킨다. 군의 큰 폭의 행정정보공개만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는 길이므로 군사기밀은 대폭 줄인다. 장관, 군사령관, 군단장을 비롯해 사단장, 연대장급 이상 군지휘관의 관공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비대화한 고급장교를 대폭 줄이고 인사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세워, 예산의 낭비와 정실인사를 배제한다. 학연, 지연, 혈연을 타파한 공정한 인사가 실현된다. 상훈도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중복되어 비대해진 부처산하기관인 홍보, 연구, 체육, 복지, 연금시설 등은 통합한다. 군 골프장은 제대군인들의 심신 단련장으로 하고 평화도서관 부지로도 확보된다. 전쟁기념관은 평화기념관으로 탈바꿈한다. 희망의 한국군대는 '작지만 강한 군대'가 된다. 전시동원체제는 외세의 침입 때만 운영된다.

둘째, 국군기무사는 구조조정되며 군 수사기관도 군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구조조정에 참여한다. 이제 군대 안의 모든 사고는 객관적인 조사기관에 의해 진상조사가 시작된다. 해방이후 군 의문사 당한 병사들과 각종 군폭력, 군기사고와 안전사고로 사망, 부상한 병사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있게 된다. 그들은 국뎠모지에 묻힌다. 동시에 80년 강제징집부터 모든 군의문사, 군폭력 사고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다시는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는 재발방지법이 만들어진다. 희생자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합동 위령제를 실시한다.

이제 '재향군인회, 성우회등 퇴역군인 단체들이 지난 50년 동안 이데올로기는 걱정해도 군의문사를 비롯한 후배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제기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을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기무사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심적인 군인들의 복무에 대한 탄압과 정치적인 감시, 양심적인 군인들의 사찰카드는 소각하고 사찰활동의 책임자는 처벌된다. 현재구속, 수배중인 양심적인 군인·전경들은 석방, 수배 해제되고 각 사단 영창과 군기 교육대는 없어져 사병인권상당실로 바뀐다. 80~90년대 양심선언 군인 전경, 양심적인 군 구속자 등 부당하게 불명예제대한 군인들은 명예가 회복된다. 군 교도소는 폐쇄성에서 벗어나고 소내 인권유린의 책임자는 소급 처벌되어 군의 장교, 사병인권현장이 발표된다. 또한 사병들에 대한 극우적 반공반북이념의 「정신교육」은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고취할 평화, 통일교육으로 바뀐다. 우편물, 도서, 면회, 소지품 등에 대한 검열은 없어진다. 전자위문편지가 생긴다. 방위산업체의 노동자 탄압은 사라지고 방위산업체는 평화산업으로 전환된다.

셋째, 현역병의 과도한 복무기간을 3군이 균등하게 일차적으로 12개월로 준다. 이어 병력감축, 무력감축과 동반하여 방위비는 일차적으로 절반으로 줄여 국민들의 군사비 부담을 대폭 줄인다. 나아가서는 종국적으로 징집제도를 철폐하고 지원병제도, 완전한 직업 군인제를 실시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예비군과 민방위제도는 점차 폐지시켜나가고 위법적인 준군사조직 전투경찰대는 해체한다. 지원병제도 실시로 그 동안 변형된 병역의무인 카투사,의경,경비교도대,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은 없어진다. 병영 안의 각급 전투부대에서는 대민 시위진압훈련이라는 충정훈련을 중지한다. 그래서 내무반에서 군화를 신은 채로 뜯눈으로 비상대기하는 일은 없어진다. 내무반은 더 이상 '수용'시설이 아니라 사병들이 개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 신병 교육대와 내무반에서 일제 잔재인 '점호'는 사라진다.

또한 군입대자들을 둘러싼 각종 병무행정의 청탁과 부정비리는 철저히 밝혀지고 부정하게 병역의무를 피한 자는 다시 군에 보내진다. 병무청은 '병역지원청'으로 바뀐다. 신병 자대배치는 스스로 보직을 정하며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군의 낭비예산을 막아 생긴 자금으로 징병제당시의 군제대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소급 적용된다.

넷째, 군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병들과 하사관, 초급장교들의 처우개선 및 인격적, 정치적 권리들을 신장시키며 구타와 가혹행위가 없는 병영생활의 민주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사병들의 근무시간외의 개인 사생활은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서 직무이외의, 혹은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군대매체는 통일지향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남북한간에 사병들의 교류가 있게 된다. 군대 안에서 반민족적인 조선일보, 스포츠조선은 구독이 금지된다. 군의 현실을 왜곡하고 회화화하는 모든 군 프로그램은 중지되고 동족에 대해 반복의식을 고취하는 '취리'의 상영도 중지한다. 군사평론은 자유로워 영역은 없어진다. 부대시설과 운동장은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더 이상 군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 대민 피해는 없어진다. 1년에 한 달 이상 의무적으로 대민활동을 나가 민·군 협조를 도모한다. 육사 등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제도를 비롯 양심적인 민족간부를 기르는 도장으로 자리 잡는다. '쿠데타박물관'을 세워 한때 군 지휘관들이 국가방위를 소홀히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산 탱크와 총구를 민중에게 들이대 정권을 찬탈한 치욕의 역사의 현장으로 교육한다.

다섯째, 군대 안에서 내부에서 군민주화를 저해하는 군사법원법 (옛 군법회의법)을 비롯한 각종 군 관계법은 개정되어 사병들의 권리를 앞장서 보호하는 법과 기관으로 바뀐다. 유신 직후 제정된 「군사기밀 보호법」, 5공 당시 국보위 등에서 만들어진 「국방보도규정」 등은 폐지되고, 민간인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모든 군 관련자료들은 시급히 공개되어 군의 역사는 객관적으로 다시 쓰여진다. 또한 사병들은 군사운영과 식단작성에도 적극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며 일부 하사관, 직업군인 등도 '주식투자'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국방'에 몰두하게 된다.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와 군인연금, 보험에서 노후안정을 보장한다. 직업군인들이 이삿짐을 싣 채 낡은 군인아파트를 전전궁궁하며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군대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군이 미국과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 주인노릇을 하며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통일지향적인 희망의 군대로 행군하는 데는 양심적인 장, 사병들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사회에서는 군인들의 인권 및 민주화, 자주화에 대한 상시적 지원, 대책기구 결성이 요구된다. 군대를 바로 세우는 구체적인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주변의 처지에서 군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종교, 노동, 단체 등에서 평화/병영 아카데미를 통해 군사정세, 군의 역사, 군의 현주소, 국방예산 평가, 군산복합체의 실체, 주한미군, 평화교육, 군인의 인권, 여성과 평화와 군대, 병역의 의무문제, 군축 - 무기를 보습으로, 평화와 통일, 기지활동가 강연, 양심적인 군인, 군사평론가 등 군을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의 강연, 토론회, 만민공동회, 분쟁지역 평화기행, 집회와 서명 등을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군 관련단체로 군인의 전화, 군인권상담소, 평화를 위한 군인회, 평화를 위한 재향군인회, 통일사회를 위한 군인연대, 민주군대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군인들의 모임, 군인들을 위한 민주인터넷 방송국, 군에 자식들을 보낸 어머니들의 모임, 군에 사랑하는 애인들을 보낸 여성들의 모임 평화통일 군사평론가협회, 민족방위를 생각하는 군원로들의 모임, 군산복합체를 걱정하는 군인들 등의 모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민주적인 '군사' 인터넷사이트 개설로 네티즌을 만나가며 여론을 만들어 나가며 재미처럼 일할 때 그 기초는 더욱 튼튼해진다,

시 「통일 그날」은 희망의 그 날을 노래하며 계속 이어진다

아! 그날 / 김현희는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으며 / 자유총연맹 사람들, 안기부 사람들 가슴에 환희가 오를 수 있을까! / 아니 꼭 그들이 아니라도 / 민족 지상과제 통일성전에서 안락을 찾아 / 낙오된 수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을까. / 통일을 반대한다던 모오든 사람들 / 이처럼 춤추고 기쁨에 눈물이 심장에 흐를 수 있을까! / 다들 기뻐서 놀

때 / 쭉그려 앉아 멀뚱멀뚱 구경이나 할까!

그런 친구들 손을 잡아다 신나게 풍물판 가득 놀아보리라 / 통일을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미제가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세금, 국방비의 무게에 짓눌려 피곤에 지친 지하철 승객들의 눈동자에도 비로서 생기가 돌고 빛이 나기 시작한다.

희망의 군대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비가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부패 군인 뿐이야/ 낡은 권위주의 뿐이야/ 육군개혁은 인정 못 해/ 더는 못 참아/ 누가 누굴 군기 잡는 거야/ 의식화라고 마음대로 떠들어/ 이젠 바꿀 거야/ 사병들의 심판 뿐이야/ 바꿔 바꿔 군대를 다 바꿔...

유행하는 노래가사와 함께 지구반대편 스페인에서 95년 12월 현재까지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한 청년학생들이 30만명이나 되었다는 된다는 소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2005년 시원한 가을 어느 날, 물가의 독수리 떼나 까마귀 떼가 완전히 몰려갔고 남북의 멧돼지와 사자가 친구가 되어 남북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한민족을 지키는 코리아연방 군인으로 태어났다. ■

※

1. 군사 주권 문제

2. "북으로도 우편 주지, 사서 마구 수 있겠"

○ 과도한 → 리니지 ; 리니지는 리니지!

병역제 - 남북경제 / 주축 / 방위비 문제 ...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 자료모음

<http://www.anticonscript.org>

1. 징병제 폐지론

경제학자의 글 - 징병제의 폐지를 위하여 (출전:forum on korean economic policy)

최근 병역의무 비리가 신문을 장식하고 병역의무 비리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법적인 의무를 일부의 사람들이 불법한 방법으로 회피한 데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병역의무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논리로, 병역의무를 폐지할 수 없는 의무로서 성역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필자는 국민들의 평등한 부담을 위해서, 그리고 병역의무가 생명을 담보로 한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라는 논리에서, 이제부터 병역의무(징병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로 한다.

병역의무(징병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혹시 이적 행위로 국가 보안법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좀 더 긴 안목으로 국가를 위한다는 견지에서 보자면, 병역의무를 그대로 두자는 사람들이야말로 국력을 좀먹게 하여 장기적으로 나라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병역의무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징병제는 국민들 사이에 매우 불평등한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징병제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셋째, 징병제는 군대를 비인도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

넷째, 징병제가 군대의 애국심을 담보하는 장치가 되지는 못한다.

다섯째, 징병제의 폐지로 무엇을 얻게 되나?

TOP 목차

국민들 사이에 매우 불평등한 부담이다

첫째, 징병제는 국민들 사이에 매우 불평등한 부담이 되고 있다.

징병제는 지원병제보다 평등한가?

많은 사람들이 징병제, 바꾸어 말해서 누구든 건강한 성인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한다는 소위 국민 개병제가 평등한 것으로 그리고 군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 군대를 충원하는 지원병제(비난하는 사람들은 지원병제보다 용병제라고 표현)는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므로 불평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는 매우 뿌리 깊은 것이어서 쉽사리 없어질 것 같지는 않으나 몇 가지 예를 들어 그러한 인식이 얼마나 잘 못된 것인지를 설명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군대 근무가 힘든 일이고 누구든 원치 않는 일이라면, 지원병제로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군대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국가는 충분한 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급료의 수준은 가난한 청년이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것 보다 나은 수준이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군인보다 다른 직업이 더 좋게 생각된다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인을 지원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한 징병제아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고생하던 것을 지원병제 아래서는 충분한 대가를 받으면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급료는 세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세금을 통해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가난할수록 세금도 더 내게 된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할 말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적어도 절대액으로는 부자가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징병제아래서는 가난하든 부자이든 같은 기간 동안 육체적 부담을 하게 된다. 만일 그 부담의 크기를 그들의 전체 소득에 대한 비율로 본다면, 그 비율은 어느 사람이 젊은 시절 군대에 감으로써 희생하게 되는 소득이 그의 생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아마도 최대의 희생자는 젊은 시절에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프로 스포츠맨들이 될 것이고, 다음은 비교적 활동 가능 기간이 짧은 육체 노동자나 단순 기능인, 그리고 다음이 기술자나 지식 노동자, 아마도 자본 소득자들은 가장 적은 피해를 받을 것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활동기간이 20세부터 10년 정도가 전성기인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맨이라면 약 2년간의 복무기간 중 소득의 1/5을 포기해야 한다. 20세부터 20년 정도 육체 노동이나 단순노동이 가능하다면 육체 노동자나 단순 기능인은 1/10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기술자나 지식 노동자의 경우는 활동가능기간이 길므로 그만큼 포기하는 비율이 낮아질 것이고, 자본 소득자의 경우는 아주 미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일 부유한 정도가 자본 소득자, 지식노동자(기술자), 육체 노동자(단순 기능인)의 순이라면, 연예인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병제의 부담은 가난할수록 부담의 비중이 높아지는 매우 불평등한 부담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최근의 병역의무 회피자 명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징병제의 부담 자체가 불평등한 것뿐만 아니라, 부유한 계층은 병무 비리를 통한 병역 의무의 회피에서도 가난한 계층 보다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징병제에 있어서의 부담의 불평등을 심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 지원병제로 하면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되므로 불평등하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지원병제가 징병제보다 훨씬 평등한 부담이라는 필자의 견해이다.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둘째, 징병제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징병제는 방위비의 부담을 줄여 주는가?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지원병제로 하는 경우 사병들에게까지 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정부에 그만한 재원이 없다거나 조금 유식한 표현을 즐기는 사람은 우리 경제의 능력으로 볼 때 그만한 방위비의 부담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가? 우리 정부는 이미 장기 하사관이상에 대하여는 급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사병에 대한 급료이다. 사병의 수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60만 장병이라고 하니 그 중 50만쯤을 사병으로 보고 연간 1000만원쯤을 급료로 지불한다고 할 때 5조원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정부에 그만큼 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말로 재원이 부족하다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성인 남성에게 대해, 병역 미필에 대한 마녀사냥을 그만두는 대가로 재산세나 소득세에 방위세 부가세를 징수해도 해결되는 문제일 것이다.

둘째로 조금 유식하게 국민경제에 사병의 급료까지 지불할 방위비 부담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칭하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돈이 오가지 않을 뿐 국민 경제는 이미 사병의 급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병 복무를 하는 청년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경우 벌 수 있었던 급료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실물적 흐름은 반드시 화폐가 오고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국민경제 전체로 본다면 건강한 청년을 군대에 보내 그들의 생산력의 활용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이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국방부나 명칭한 징병제 주장자들만이 그들의 귀중한 인력을 공짜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그러한 부담은 지원병제에서 보다 징병제에서 더욱 높아진다. 왜인가? 첫째로, 징병제는 인력의 적절한 활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컴퓨터 공학 박사가 징병제에 따라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그가 사병으로 군대에서 할 수 있는 보통 사병들과 그다지 다를 것이 없이 소총을 쏘고, 청소하고, 간단한 사무를 보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비용은 매우 크다. 그가 산업 현장에 있었다면 생산성의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었는데 국민경제는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만일 지원병제에서라면 국방부가 구태여 그러한 고급인력을 끌어다가 청소시키고 소총 연습을 시킬 리가 없다. 혹 그를 뽑아 쓰는 경우가 있다면, 그가 첨단 전자 제어 무기의 조종에 필요하여 민간 부문 보다는 많은 급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일 것이다. 지원병제라면 군대에서도 소총수에는 소총수에 맞는 인력을 타이피스트에는 타이피스트에 맞는 인력을 주방에는 주방에 맞는 인력을 쓰게 된다. 그리고 좀 더 장기에 걸쳐 복무하게 될 것이다. 교육 비용도 절약되고,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소위 짬밥(군대의 식사)도 좀더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국민경제가 실제로 부담하는 방위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원병제의 경우가 적은 비용으로 더 강력한 방위력을 유지하는 방법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징병제의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비용은 국방부의 관리나 군대의 장교의 비용인식의 결여에서 발생한다. 보통 군대에서는 사병의 비용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장 집에 밥하는 사병, 청소하는 사병까지 두고, 사단장 1명에 줄잡아 10명 가까운 개인적 보조인력이 따르게 된다. 일반 회사에서 주인인 사장도 그러한 일은 하지 못한다. 월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군대에서는 왜 가능한가? 월급이 없으니 비용인식이 없고 그것이 국가의 자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이라는 인식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이 것은 매우 작은 부분이고, 크게는 방위력을 증강하는데 있어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과 기계화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결정도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징병제아래서는 인력에 대한 비용인식이 없으므로, 징집할 수 있는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는 절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복하는 셈이 되지만 같은 수준의 방위력을 유지하는데 드는 국민경제의 실질비용은 징병제의 경우가 지원병제의 경우보다 훨씬 크게 된다.

군대를 비인도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든다.

셋째, 징병제는 군대를 비인도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

징병제는 군대 조직의 비효율성의 원인

이미 왜 징병제가 낭비적인가를 "징병제는 방위비 부담을 줄여 주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징병제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적어 보기로 하겠다. 필자는 방위병으로 13개월을 군대에서 근무하고 육군 일병으로 제대했습니다. 당시는 방위병도 군대에 근무하던 시절이므로 제가 군대를 모른다고는 비난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는 10여년 전, 대학원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다가 육군 이등병으로 수도 근교의 모 예비사단에 입대하였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관계도 있고, 업무의 특수성도 있어, 방위병으로는 이례적으로 군대에서 침식을 하는 일이 많았다.

3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입대에서 제대하기까지 1년간 최 말단이었던 제가 한일은 변소나 부대 주변의 청소, 사병이나 하사관들의 잔심부름, 우리 부대장의 야간 대학원 레포트나 하사관, 장교들의 방송통신대학 레포트 쓰는 것 도와주기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간혹 부대장으로부터 문장력이 좋지 않은 하사관의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지만... 만일 문화 대혁명 당시의 모택동의 사상, 지식인들도 강제적으로 육체적 노동을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드리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 분들은 북한이나 과거의 중국을 비난하셔서는 안되고, 우리 경제가 30년쯤 뒤로 돌아가도 불평을 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나의 친구 하나는 의사인데 군의관으로 가지 않고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야간 보초를 서다가 상급자한테 태도 불량으로 얻어맞고 의무실에 입원한 뒤 군의관의 배려로 의무병이 되고서야 의사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게 된 예도 있습니다. 군대가 인력의 배치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용감각이 없으므로 인력 자원의 활용도 효율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필자가 관찰한 부대의 일들은 늘 매우 한심한 것들로 꼭 차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복사기가 없어서, 5 60장의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면 먹지를 대고 몇 명이 여나쁜 장씩 써 낸다든가, 포크레인(정확한 용어로는 엑스카베이터)으로 두어명이 서너시간이면 될일은 십여명이 한나절에 해 낸다든가 그 예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습니다. 인력과 시간들이 남았으므로 싸리비를 만들기 위해 부대 전체가 동원되기도 했고, 그래도 처치할 수 없는 시간에는 무언가를 이유로 기압을 받기도 하였다.

부대에 필요한 인력과 배치된 인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가위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 이발병이 되기도 하였는데, 회계사 출신의 사병이 능력을 인정받아 창고의 재고 관리를 맡게 된 것은 그나마 인재의 적재 적소 활용에 속한다.

아마도, 지원병제로 하여 이들 사병에게 모두 월급을 지불해야 한다면 회계사출신을 창고지기로 뽑거나, 장교나 하사관들의 야간대학 레포트 쓰기를 대신해 주기 위해 석,박사 출신 사병을 채용

하지도, 보조병이나 의무병으로 쓰기 위해 고급 의사를 불러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가위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을 이발병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복사기 한 대 값을 절약하기 위해 그 보다 몇 배 비싼 인력을 복사기 대신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임도 당연하다.

앞의 글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사병들에게 충분한 월급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다면, 사단장 사모님과 가족들의 우아한 생활을 위해서, 사병들을 사단장 공관의 주방, 청소, 가사에, 심하게는 가정교사까지로 공급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전임자에 대한 배려라는 이유로 퇴역한 장군의 집에 배치되어 사병생활을 마친 예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도 자질구레한 예에 속한다. 징병제는 군 인력의 과대 보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징집 가능 사병이 늘어나면 이를 통솔할 장교조직도 필요하고, 군대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사병을 줄이더라도 식비나 피복비 정도가 절감될 뿐, 예산은 그다지 절감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삭감하는 대신 그 예산을 써서 다른 방법으로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어렵게 되고, 더구나 조직이 줄게 되면 상위 장교의 자리가 줄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방부나 군에 군 인력을 삭감할 인센티브는 작을 수밖에 없다. 징병제로 인해 군은 그다지 방위력의 강화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데도 과다한 인력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인력 절감의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즉, 이미 말했듯이 징병제로 인해, 국방부나 군에 인력에 대한 정확한 비용 감각이 결여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는 매우 귀중한 인력들을 군에서는 아주 하찮은 일들에 낭비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고, 같은 수준의 방위력을 유지하는데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결정도 왜곡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개병제 내지 징병제는 장기 복무를 곤란하게 한다. 모두가 군대에 가게 되므로 장기 복무를 하는 경우 그 숫자를 모두 군대 조직이 수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만, 강제로 군대에 가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불평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징병제하에서 군대의 사병 복무기간은 2 3년이 한도이게 된다.

군대 복무기간이 짧으니까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낭비이기도 하다. 즉, 군대에 전문가가 부족하게 되고, 군 입장에서는 2년 정도 복무할 사병들을 위해 과다한 교육 비용을 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군은 늘 아마추어들의 조직으로 남게 된다. 물론 장교나 하사관 조직을 통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대다수가 아마추어로 구성된 조직인 것만은 분명하다.

지원병제로 하는 경우 복무기간도 지원자와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인재를 필요에 따라 선발할 수 있으며, 군은 장기 복무자에 대한 교육 지출을 확대하여, 군대 조직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애국심을 담보하는 장치가 되지는 못한다.

넷째, 징병제가 군대의 애국심을 담보하는 장치가 되지는 못한다.

징병제는 애국심을 담보하는가?

징병제 내지 국민개병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는 용병제 내지 지원병제로

하는 경우 애국심이 없는 군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용병제로 인해 망한 국가들을 예로 든다. 예컨대 로마가 멸망한 이유중의 하나로 외국인 용병을 중요한 이유로 드는 것이 그렇다.

그러나 한국이 용병제를 택하더라도 외국인이 한국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주장 하는 지원병제가 군인을 월급을 주고 고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용병제임에 틀림없지만, 용병제가 갖는 갖가지의 부정적 이미지는 우리 국민들 중 군대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군대를 구성한다는 지원병제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사실, 단순히 월급을 주고 군인을 고용하는 것은 용병제이고 용병제를 택하면 군대에 애국심이 없어져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은 그 근거도 알 수 없거니와 이미 우리 나라도 군의 상층부인 장교집단은 군인으로서의 급료를 주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용병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가? 즉 용병제로 하면 애국심이 없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을 하기에 앞서 용병제인 한국의 장교조직에 대해 비판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용병제는 위태롭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군의 지휘부를 용병제로 채워 놓을 수 있는가?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지원병제(급료를 생계수단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용병제)를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안보적으로 우리보다 위대한 나라인가? 미국은 월남전 이후로 징병제를 폐지했고 지원병제로도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징병제가 폐지되어 군의 애국심이 없어졌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물론, 용병제에 전 국방력을 맡긴다는 것은 확실히 위험한 일이다. 한국의 경우 군의 장교집단이 주도한 두 차례의 쿠데타가 그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징병제가 그러한 쿠데타를 막는데 그다지 유효하지 않았다는 것은, 쿠데타에서 보여준 징병제 사병들의 행동에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광주 학살에서 징병제 사병들이 정치 장교들의 야심을 저지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도리어 징병제 사병들이 장교들의 명령과 관계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증거들까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징병제가 군의 애국심을 보장한다는 징병제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첫째로, 용병제에 의한 장교집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된 것이고, 우리의 최근 역사에서 일어났던 쿠데타 사건에서 징병제 사병들이 보여준 행동에 비추어 근거가 없는 것이 판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군의 애국심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첫째로 군을 현재 보다 개방된 집단으로 하여 군과 민간과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여 군대의 특수 집단화를 완화하고, 둘째로, 군에 대한 문민의 지배(civilian control)가 대통령이 각 군 참모총장을 임명한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비교적 세세한 수준에까지 문민에 의한 군의 통제를 관철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대 조직의 민주화와 합리화가 필요하다. 즉, 군대내에서도, 상관의 개인적 지시와 국가의 법령에 의한 상관의 명령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슬픈 일은 우리

가 광주 사태의 처리에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에는 답하지 못하고 전두환씨나 몇몇 정치 장교에 책임을 미룬 채 상관의 개인적 지시와 국가의 법령에 의한 명령을 구분하지 못했던 장교나 사병, 그리고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학살을 저질렀던 군의 만행자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다

징병제의 폐지로 무엇을 얻게 되나?

필자는 많은 건강한 청년들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군대에 가고 있는지를 의심한다. 특히 필자의 경우 독재 정권 시대에 군대에 입대했던 관계로, 무엇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야하는지 조차 회의에 빠졌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좀 더 솔직하게, 민주화된 지금에 있어서도, 현재의 한국의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다지 즐거운 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군대에 가는 것이 그렇게 신성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그것을 권리로 할 일이지 무엇하러 의무라고 하고 가지 않는 사람을 벌 주어야만 하는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성한 의무라고 믿고 있는 병역의무가 실은 많은 건강한 젊은이들에 의해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문제의 해결점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국토 방위가 진정으로 훌륭한 국가에 대한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와 같은 강제된 의무에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난번의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병역을 기피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랑거리나 되는 낭 하였지만, 기실은 우리나라 정치가들의 도덕적 수준 자체가 평균적으로 일반인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어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겪게 되는 군대 복무를 마친 것을 가지고 대단한 일인 낭 자랑할 수 있는가? 만일, 보통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왔다고 크게 자랑한다면 곧 바로 "어디 군대 갔다 온 사람 자네 뿐이야" 하고 주위로부터 편잔을 듣게 될 것이다. 아마도, 징병제가 아닌 지원병제 하에서, 군인을 하나의 직업 또는 생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국토 방위를 위한 봉사로서 복무한 사람이라면 자랑스럽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징병제의 폐지에 의해 얻게 되는 것으로는

첫째, 국토 방위에 대한 봉사가, 마지 못해하는 의무로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자랑스런 권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만으로는 국토 방위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겠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직업군인제도로 충원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인 이익이다. 징병제가 폐지되면 군대는 사병 인력의 비용을 인식하게 되고, 군의 인력을 대폭 절감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겨 나는 인력은 각종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방위 분야에서 기계화와 정보화가 급진전을 이루게 되고, 이 때문에 생겨나는 수요는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만일 군의 정보화 기계화로 기존의 사병인력을 1/2로 절감하고도 동일한 방위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는 적어도 가장 생산적인 인력 20만명 이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민총생산을 3.5%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이들은 여러가지 꿈을 갖고 있고 각자가 자기의 적성에 따라 자신의 발전과 함께 국가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젊은이의 20대의 2년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러한 젊은이의 꿈을 깨고 확일적으로 강제 군복무를 시키는 것이 과연 신성한 일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갖게 하는 것인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봉사할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준다면, 많은 경우에 군복무보다도 더 값지게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징병제 옹호자들은 군대를 가는 것 보다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빛낼 특출한 사람들에게는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예를 들어가며 징병제아래서도 문제가 없다고 역지를 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변소 청소나 차렷, 열중쉬엇 하는 것 외에는 국가에 봉사할 재주가 없기 때문에 군대에 갔다는 말인가? 그러한 특혜 제도는 군대를 가는 사람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그야말로 재주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만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병역의무는 신성한 것이 아니라 무능함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 군대에 안 가도 될 만한 잘난 인간을 누가 판별할 것인가? 명칭하고 탐욕스런 관리들에게 그 판단을 맡기고자 하는가? 월남전이 한창이던 무렵 무하마드 알리는 군복무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세계 참피언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물론 필자가 이창호나 박찬호를 군대에 보내자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누구든 보다 자유롭게 그들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넓혀 주고 싶다.

즉, 징병제의 폐지에서 가장 큰 이익은 매우 인간적인 것으로 젊은이들의 꿈의 실현이나 인생의 계획들이 징병제로인해 어긋나는 일들을 막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각자가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국가에 봉사함으로써 징병제로 봉사하는 것 보다 더 크게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징병제 폐지의 가장 큰 이익이다.

2. 비교 우위론

남녀공동징병제

「CIA World Factbook」(1999)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매년 입영 가능한 만 18세 남성의 수는 400,468명(1999 est.)이라고 한다. 각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의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입영 가능한 만 18세 여성의 수는 매년 약40만명으로 추산된다.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이중 약 30만명이 일반사병(현역)으로 입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1999년의 경우 전체 징병검사 대상자(남성) 중에서 현역판정비율은 84.4%이었음 ; 조선일보,99/12/23), 진입(신병입대)과 퇴출(만기제대)의 시간적 간격(※ 복무기간 ; 육군의 경우 현재 26개월임)이 약 2년이므로 일반사병이 약 6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입과 퇴출이 매년 일정한 규모(ex.30만명)로 이루어지더라도 양자의 시간적 간격이 커지면,인력 풀 자체가 커지게 됨) 아울러 현재 정규군에서 간부(장교/하사관)가 차지하는 비율이 24%인 것을 감안할 때 144,000명의 군 간부를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굳이 여성일 필요가 없음) 따라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총병력(정규군)은 현재의 69만명에서 1,434,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국방비는 현재의 137,490억원에서 204,45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예산(추경포함) 기준) 국방비 증가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99년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137,490억원이다.(※ 부재정의 16.7%, GDP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임 ; 국방부, 1999) 이중 경상운영비가 85,186억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62%를 차지하며, 투자비는 52,304억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38%를 차지한다.(국방부, 1999) 경상운영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력운영비(72.8%)로, 여기에는 인건비(81.1%)·급식비(15.3%)·피복비(3.6%)가 포함된다. 이러한 인력운영비를 현재의 총병력으로 나눌 경우 1인당 인력운영비를 구할수 있는데, 계산에 의하면 1999년의 경우 한국군의 1인당 인력운영비는 8,989,275원 이었다.(※ 62,026억(원) ÷ 69만(명) = 8,989,275(원)) 그런데, 이러한 인력운영비는 병력의 증가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가변비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과 계산의 편의를 고려해 1인당 인력운영비를 9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로 인한 국방비의 추가지출은 66,960억원이 된다.(※ 744,000(명) × 900만(원) = 66,960억(원) ; 규모의 경제로 인해 1인당 인력운영비가 감소할 수 있으나, 반대로 규모의 비경제로 인해 1인당 인력운영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1인당 인력운영비가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했음 ; 본 분석에서는 경상운영비에 포함되는 교육훈련·장비운영·시설건설·예비전력관리·부대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의 추가지출은 66,960억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러한 추가지출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현재의 19.2%에서 20.7%로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1998년) → 849,152억원(조세총액)/4,431,270억원(경상GNP)) 그런데,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로 인해 상당수의 여성 인력이노동시장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GNP의 감소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의 조세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경제활동인구(1999.12) → 남성:12,916,000(명), 여성:8,738,000(명) ; 취업자(1999.12) → 남성: 12,220,000(명), 여성: 8,395,000(명)) 그리고 이러한 조세부담(증가분)의 상당부분은 남성 근로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누진세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남성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균임금(1998년) → 남성:1,274,784원/月, 여성: 804,343원/月) 문제는 이러한 조세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력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양자의 군사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는 ①단순개수비교 ②전력지수(사단등가화력, DEF) ③군사투자비누계 이다.

개수비교법을 적용할 경우 몇몇 분야에서 현재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무장보병의 급속한 증가와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할 때 전력지수와 군사투자비누계에서는 최근 우리가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함택영(1998)의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법문사)을 참조하기 바람) 그런데,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로 인해 경상운영비가 늘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구축되어 전력지수와 군사투자비누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총병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력은 오히려 저하될 수가 있다.(※ 미래시점까지 감안할 경우 전력지수와 군사투자비누계의 성장률이 원래의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임)

단순개수비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로 인한 총병력의 증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할 지 모른다. 그러나, 개수비교법은 양자의 질적인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만한 지표는 되지 못한다 예를들어 전차의 경우 현재 북한은 한국에 비해 1.7 : 1의 우

위를 유지하고 있다. (※ 북한 → 3,800여대, 한국 → 2,300여대 ; 국방부, 1999) 그러나, 3,800여대의 북한 전차에는 현재 구형으로 판단되는 T-54/55/59 전차(1950년대 형)가 포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차 대전 때 쓰던 T-34 전차까지 들어 있다. 아울러 북한의 주력전차인 T-62 전차(※ 일명 천마호 전차)의 경우 아군 전차에 비해 발사율·명중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장률이 굉장히 높다.(※ 포의 경우 수명이 아군 전차의 3/10이며, 엔진의 경우는 1/4임 ; 함택영, 1998) 반면에 한국은 세계 최강의 전차인 M-1(M-1A1)을 모델(축소형)로 한 K-1전차(※ 일명 88 전차)를 1,000여대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보유한 T-62 전차는 380여대임 ; 국방부, 1999), 현대적 화력관제 시스템을 장착할 경우 T-80 전차보다 우월할 수 있는 M-48A5 전차도 1,000여대나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M-48A5 전차의 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함택영, 1998) 그리고 보병부대의 산악전뿐만 아니라 대전차전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헬기 전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 → 290대, 한국 → 620대 ; 함택영, 1998) 아울러 현재 북한이 심각한 유류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참고로 북한의 연간 전차 생산고는 100~150대임 ; 함택영, 1998)

병력의 경우 현재 한국이 69만명의 정규군과 304만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117만명의 정규군과 745만명의 예비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병력의 질은 우리가 훨씬 우수하다. 일부 특수부대의 경우 훈련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상당수의 북한군들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훈련대신 건설공사·영농활동에 동원되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부대조차 식량의 상당부분을 자체조달하고 있음 ; 함택영, 1998) 반면에 한국군은 최신훈련기법인 BCTP(※ 컴퓨터를 이용한 전투지휘훈련)·MILES(※ 레이저를 이용한 부대간 교전훈련)를 이용한 훈련을 받고 있다.(※ 단, 최근 경제침체로 인한 예산삭감으로 인해 BCTP의 경우 모델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MILES의 경우 훈련규모가 연대급에서 대대급으로 축소되었다고 함 ; 국방부, 1999) 1인당 군사인건비의 경우 우리가 북한에 비해 6 : 1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1993~1994년 기준 ; 함택영, 1998), 병력의 질적 수준도 우리가 북한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 0.31, 한국 → 0.46, 미국 → 0.48, 일본 → 0.63 ; Dunnigan, 1993) 그러나, 우리가 남여공동징병제의 실시를 통해 총병력을 증가시킬 경우 상대적으로 병력의질이 떨어질 것으로 생긴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부터 북한군의 식량 및 물자보급이 점차 열악해졌다고함 ; 함영, 1998)

물론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10만명의 특수부대는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이들의 규모는 과대 평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121,500명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미국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의 특수부대를 1978년에는 41,000명, 1991년에는 60,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편차는 특수부대의 개념정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10만명 이상의 숫자는 한국군 사단의 수색대와 해병대, 정규 경보병, 그리고 혼성여단에 해당하는 부대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한국의 특수부대도 특전사 7개 여단, 해군 UDT 부대, 정보사 산하부대 외에 전방군단 소속의 수개 특공연대, 해병대 2개 사단 및 1개 여단, 그리고 사단 수색대대들을 전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가 된다.(함택영, 1998) 아울러 전쟁 초기에 북한이 침투시킬 수 있는 특수부대의 수는 크게 제한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해상침투 5,000명·공중침투 2,000~3,000명이 최대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 한다.(※ 땅굴을 통한 침투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이 남방한계선을 통과한 적은 없음 ; 함택영, 1998)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제공권과 제해권을 우리가 장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수부대의 후속침투와 보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들은 태반이 경무장 보병이기 때문에 화력·기동성·병참보급에서 정규부대에 필적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함택영, 1998) 특수부대 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무기도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500~5,000톤의 화학무기와 13종의 생물학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국방부, 1999) 북한이 이러한 무기들을 SCUD(500km)·노동 1호(1,300km)·대포동 1호(1,800~2,500km)에 실어 날려보낼 경우 한국은 엄청난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60만명의 소총수가 아니라, 요격용 미사일이다.(※ 참고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대포병 레이더가 필요함)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로 인한 66,960억원의 추가지출을 무기구입에 전용할 경우 차기유도무기인 SAM-X를 137기나 구입할 수 있으며, 덩으로 공중조기경보기(AWACS)까지 1대 확보할 수 있다.(※ SAM-X → 450억원/기, 공중조기경보기 → 5,160억원/대 ; 국방부, 1999) 참고로 현대전에서는 정보전력(ex. 공중조기경보기, 무인정찰기, 정찰위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군은 이 중의 상당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공중조기경보기를 17대나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1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도 총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 북한이 총병력(정규군)에 있어서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때부터가 아니라 1979년부터였다.(※ 1978년: 북한 → 612,000명, 한국 → 642,000명 ; 1979년: 북한 → 692,000명, 한국 → 638,000명) 게다가 약간의 진폭은 있지만, 한국의 총병력은 1985년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1985년: 북한 → 784,000명, 한국 → 600,000명) 비록 방위병과 예비군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50~70년대에 한국이 총병력(정규군)에 있어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60년대 말까지 한국은 병력 수에 있어서 '세계 4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었음 ; 함택영, 1998)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한국은 80~90년대에 충분히 병력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병력증강 대신 국방비에서 투자비의 비중을 높이는 자본집약형 군대의 길을 택했다.(※ 1974년~1981년 → 7.5%, 1982년~1986년 → 12.6%, 1987년~1992년 → 32.1%, 1993년~1999년 → 47.8% ; 국방부, 1999) 그 결과 한국군은 북한군에 대한 전력지수의 열위를 서서히 만회하게 되었다.(※ 1973년 → 50.8%, 1981년 → 54.2%, 1988년 → 65%, 1992년 → 71% ; 함택영, 1998) 반면에 북한군은 게릴라전을 중시하는 김일성의 교시 탓도 있지만, 70년대 이후의 경제침체로 인한 무기구입의 애로로 인해 경무장 보병의 비중을 늘리는 노동집약형 군대의 길을 택했다. 그 결과 북한군은 한국군에 대한 질적 우위를 상실해 버렸다.(※ 적어도 70년대까지 북한은 장비에 있어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었음 ; 함택영, 1998)

그리고 현재 국방부는 대규모 전면전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미래에는 정치적·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적 국지전 및 제한전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국방부, 1999) 게다가 국방부는 인력의 전문화(※ 30% 이상의 간부비율 증가)와 구조적 효율화(※ 육군(現 81%)의 점진적 감축과 해·공군의 증강)를 위해 병력의 단계적·신축적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비록 한반도의 통일이러는 전제조건이 들어가 있지만, 국방부가 미래(서기 2015년경)에 유지하려는 한국군의 규모는 40~50만명 이다.(국방부, 1999) 참고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판단한 한국군(지상군)의 적정규모는 20~25만명 이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얻기 위해 총병력의 증가를 주장했는데, 그 결과 미국은 65만명이라는 상한선까지 지상군의 확대를 도와주게 되었음 ; 여기에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북한과 중국의 연합공격에 대비하려는 군사적 고려가 깔려있었음 ; 함택영, 1998)

총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보직관리와 부대배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병력자원 자체가 부족한 경우(ex. 이스라엘, 남미 게릴

라, ...)와 일부 특수부대(ex. 특전사)를 제외하고, 여성을 일선전투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방어를 위해 해병대 1개 사단을 제외한 모든 부대가 휴전선 100km 이내에 전진배치되어 있다.(함택영, 1998) 총병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현재 한국군의 구조와 배치를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한다. 아울러 쿼터의 부족으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은 일부 남성·여성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을 사회봉사활동(※ 일명 공익근무요원)에 투입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 또한 별도의 예산지출이 불가피하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식비·교통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을 받는데, 이를 감안한 예산의 추가지출은 7,200억원이 된다.(※ 10만(원) × 12(월) × 60만(명) = 7,200억(원) ;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생계비지원금(1997년)은 76,140~99,630원(인/月)임) 게다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최근 공익근무요원의 모습이 혼해집에 따라 이 부분도 인력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방부는 현재 복무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일보, 2000/01/27)

마지막으로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로 인한 국방비의 추가지출이 새로운 유효수요를 창출할 지 모른다는 견해(※ 일명 군사적케인즈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다. 1957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다중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국방비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특이값으로 판정되어 배제되었던 1980년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 경제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실질경제성장률(GNP)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66,960억원의 추가지출은 무기구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케인즈주의의 시각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일부 여성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군가산점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기한 분석에 비추어볼 때 그리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남녀공동징병제가 법적인 관점에서는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좋은 제도일지 모르지만, 경제적·군사적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현재의 징병제가 바람직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의 개선방안은 다른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징병제 VS 모병제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징병제를 모병제보다 비효율적인 제도로 간주한다. 모병제의 경우 입영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들(ex. 실업자, 저소득층, ...)부터 군대에 들어가게 되지만(※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감안하기 바람), 징병제의 경우 이러한 기회비용의 원칙이 무시되어 자원(인적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박찬호가 1998년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지금쯤 연봉 425만 달러의 메이저리거 대신 월 1만원을 받는 소총수가 됐을것임) 물론 납세자들은 명목적인 세금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징병제를 모병제보다 더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프리드만(M. Friedman)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 "There is no something like free lunch.") 일정한 수준의 국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병역제도의 유형(징병제·모병제)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 단, 징병제의 경우 이러한 생산비용의 상당 부분을 강제징집자들이 암묵적 세금(implicit tax)의 형태로 부담하기 때문에 국방서비스의 명목생산비용이 모병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징병제 하에서는 사람들이 국방서비스의 생산비용을 과소평가하는 재정착각(fiscal illusion)이 발생하며, 편익의 수혜자(납세자)와 비용의 부담자(강제징집자)가 분리되기 때문

에 경제적 형평성이 떨어지게 된다. 세대간 계산법을 적용하면 이러한 비형평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징병제는 미국의 노인의료보험(medicare)처럼 현세대가 아버지세대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아들세대로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생각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강제징집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ex. 여성, 장애인, ...)은 무임승차자(freerider)로 계속 남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재정적인 관점과의 구분이 필요함)

군사적인 관점에서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낫다. 일반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병력의 질적 수준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보다 높다.(※ 징병제: 러시아→ 0.28, 대만 → 0.48, 이스라엘 → 0.55 ; 모병제: 영국→ 0.53, 호주 → 0.61, 남아공 → 0.68 ; Dunnigan, 1993) 사실 모병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군사적 측면보다는 재정적 측면이 강하다. 국방부가 미래에 예상하는 것처럼 한국군의 규모가 50만명으로 유지되고, 이중 간부가 3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일반사병은 35만명이 되는데, 이들에게 급여로 연간 1,920만원을 지급할 경우 67,200억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160만(원)× 12(월) × 35만(명) = 67,200억(원) ; 간부(esp. 하사관)와의 임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졸자(남성)의 평균임금(1998년) 1,599,488원/월을 계산에 원용했음)

개인적으로 인력 확보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경제적 유인이면, 여성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임금(1998년) → 대졸자(여성): 1,225,303원/월) 즉 상당수의 여성 인력의 공급을 통해 모병제의 실시로 인한 병력 부족을 메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대가 민간부문에 비해 재해발생률이 2배 정도 높은 편이지만(국방부, 1999),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상당수의 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육군의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1992년 → 153명, 1993년 → 135명, 1994년 → 127명 ; 김성걸·이상기, 1998) ; 참고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1992년 → 2,429명, 1993년 → 2,210명, 1994년 → 2,678명, 1995년 → 2,662명, 1996년 → 2,670명, 1997년 → 2,742명 ; 통계청, 1998))

단, 현재 경제위기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 1999년 일반회계의 경우 10조 4,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음 ; 한국일보, 2000/01/03)와 여성 인력의 증가로 인한 보직관리·부대배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모병제의 실시는 당분간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에서 모병제의 실시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방비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70년대 → 6%, 80년대 → 4~5%, 90년대 → 3%) ; 미국에서 현재 개발중인 신형 전투함의 경우 항공모함과 동일한 화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력은 항공모함의 1/10에 불과하다고 함) 아울러 한국도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조만간 노동인구의 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늦어도 21세기 중반에는 모병제의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UN 인구국은 한국도 50년 후에는 상당수의 노동인구를 수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동아일보 2000/01/07) 현재

현행 징병제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은 10만명의 일반사병을 감축하는 대신 5,000명의 간부를 추가로 고용하는 안이다.(※ 한국의 경우 상비군에서 일반사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높은 편임 ; 김성걸·이상기, 1998) 이 경우 상당수의 남성이 병역의무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방비의 부담 없이 모병제를 실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병역면제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육군의 입장은 불분명하나, 만성적인 간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해·공군은 크게 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국방대학원의 나기선 교수(1995)는 10만명의 병력을 감축할 경우 가용투자비가 늘어나

게 되므로 육·해·공군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성걸·이상기, 1998)

현재의 군가산점제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그 동안 상당수의 분들이 병역제도에 관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5%의 가산점 비율은 과했다고 느끼지만, 군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선을 남녀에게 똑같이 적용하므로 군대를 갔다온 남성이 시험준비기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군가산점의 비율이 3% 정도였다면, 여성도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남성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전에 국방부가 여성 단체에 제시한 절충안도 위의 내용과 대동소이함 ;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민간부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자격증의 취득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봄)

군이 결론을 내린다면, 모병제가 남녀공동징병제나 현행 징병제에 비해 우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재정적·행정적인 한계로 인해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병력 감축을 통해 모병제를 실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모병제의 실시와 관련된 재정적·행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외국 병역제도

미 국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평시에는 지원제를, 전시에는 징병제를 채택하여 왔다. 독립전쟁 초기에는 시민군을 주력으로 한 가운데 일부 지원병의 충원으로 전쟁을 수행하였으나, 더 이상 충원이 어렵게 되자 대륙회의 [1774년 당시 13개주 대표에 의하여 창설된 미국 독립을 위한 최고회의] 의 제안에 따라 추첨에 의한 선발 징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독립이 성취된 다음에는 지원제로 환원하였다가,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북군측에서 시민군법을 제정하여 징집으로 군인을 충원하였으며, 1863년에는 정식으로 징병법을 제정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3백달러 가량의 현금을 납 부하는 사람에게는 징집을 면제해 주었다고 한다. 앞장에서 말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군포제 인 셈이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부족한 병력을 징집으로 충원토록 하는 의무 병역법을 제정· 실시하였으며, 전쟁의 종료와 함께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1940년에는 평화시에도 징병제를 채택한 의무훈련법을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을 치렀으며, 전쟁 종료와 함께 지원제로 되돌렸다가 한국전쟁에 이어 월남전이 발발하자 징병제를 부활 시키는 등 병력충원 방법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월남전이 끝난 1974년 이후부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지원병제에 의지한 병역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병역제도는 평시에는 선병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쟁 발발시에는 병력수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징병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다.

지원자는 현역병·예비군부대 또는 주(州) 방위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18세부터 26세까지 이다. 현역병의 복무연한은 육군과 해병대는 3년이고, 해군과 공군은 4년이다. 군별로 복무연한 이 다른 것은 병사의 훈련에 투자되는 비용과 훈련기간 및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것은 어느나라, 어느 군대도 마찬가지이다. 현역에 지원하여 2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긴급예비군에 소속될 경우에는 2년을 더 복무하게 되나, 예비군부대에 편성되지 않은 사람은 1년을 더한 3년 동안 개별동원 통제요원으로 긴급예비군에 편성되어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비군은 긴급예비군과 대기예비군 및 퇴역예비군으로 구분된다. 예비군부대 지원자는 6개월